

R1.1.8

인권하루소식

합본8호
(97년 상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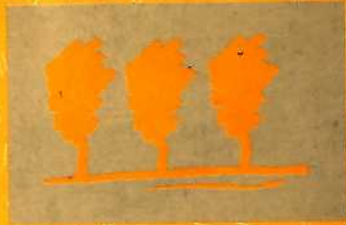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합본8호 (97년 상반기)

R1.1.8

인권운동사랑방



반인륜적 작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뿔주린 복녀'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의 해결없는 '인권'은 가진 자의 '여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어에 대신하여

폭력이 판치는 세상. 97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내린 우리 사회에 대한 결론이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그것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든, 양심을 짓누르는 폭력이든 가장 직접적인 인권유린 행위임에 분명하다. 문민정부의 출범에서 그나마 기대했던 것도 이러한 폭력과 탄압 만큼은 사라질 것이란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종착역에 다다른 지금, 그러한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우리는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나마 확보했던 최소한의 시민권조차 유린당하고, 대선을 앞둔 하반기에도 살벌한 공안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자유'와 '시민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폭력과 탄압 못지 않게, 사회적 차별과 억압 역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인권유린행위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태수 씨가 뇌물로 수십 억씩을 뿌리고 다닐 때,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방 한칸 마련 못해 노상에 잠자리를 펴야했다. 경제적 손실과 외관상의 이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들을 쫓아냈으며, 서민들은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면서도 돈 '몇푼'이 없어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남녀평등'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도 여성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으며,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갈 곳은 '불야성의 환락가'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 곧 대통령후보들의 입에서 수만가지의 공약과 주장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다는 중소기업인들에게서 나오는 '표'가 더 중요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보다 더 중요한 그들에게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자기기만 행위일 것이다.

아직 미미한 역량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권운동의 분발이 더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1월

(제797호 - 제815호)

개악된
노동법·안기부법
완전폐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종로·명동서 2만여 명 개악반대 시위 민노총 23만명 파업...날치기통과 이후 최대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
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
기 처리에 대한 저항의 수
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일부의 예상과 달리 새
해 들어서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이 속속 파업에 합
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 금속 등 제조업에 이어 6
일 사무직, 7일 공공부문
및 KBS, MBC 등 방송4사
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민
주노총의 2단계 총파업 투
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사무노련·건설노련·전문

노련 등 이른바 '넥타이부
대'가 총파업 합류를 선언
하고 집회와 거리시위에도
동참함에 따라 6월항쟁 10
년만에 넥타이 시위가 재연
될 조짐이다.

넥타이부대 총파업 돌입
6일 오전 8시를 기해 2단
계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날치기 노
동법·안기부법 전면 무효
화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를 치렀다. 이날 집회에 민
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대
학생,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참석자
들은 오후 6시경 명동성당
에서 정리집회를 마칠 때까
지 시내와 명동일대를 '신
한국당 해체' '김영삼 정권
퇴진'의 함성으로 뒤덮었다.

'김영삼 정권 퇴진' 함성
결의대회에서 6일 파업
에 합류한 사무노련 김국진
위원장은 "노동자·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적 항쟁에 나
서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대덕연구
단지 주요 연구소 등 38개
노조 1만4천여 명이 총파업
에 참여한 전문노련의 양경

규 위원장은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넥
타이부대가 나서서 강력히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
한 것과 관련해 권 위원장
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
직 50만 조합원과 1천2백만
노동자들만이 소환할 수 있
다"며 "오히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방국의 주역인 자
본가와 김영삼 씨를 역사의
심판대에 소환하겠다"고 주
장했다.

검찰 소환 불응
민주노총은 7일 병원노련
및 방송사의 합류 등으로
총 2백여 개 노조 23만 명
이 총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고 밝혔다. 23만 명 총파업
은 96년 12월26일 날치기
처리 이후 가장 큰 규모이
다. 민주노총은 또 7일 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비롯한 이후 일정에서 정부
와 여당이 개악안 철회 의
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의
하철과 통신 노조 등 국가
기간산업 부문도 총파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
인상)은 7일 이수성 국무총
리와 진념 노동부장관, 신
한국당을 차례로 항의방문
해 노총측의 최종입장을 전
달한 뒤, 대표자회의를 거
쳐 총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보건복지부: ◆의보수가 평균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
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
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
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1인 월10만7천원서 월3만
3천원으로 ◆노령수당 지급=70세이상서 65세이상 생활
보호대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액 월3만-5만원서 3만5천
원-5만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지원금 월25만원서 50만
원으로 ◆신생아들의 대표적 선천성 대사이상 중 페닐
케톤노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무료 검진

·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채류자
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채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
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채류 가능

·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
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
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중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
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
한 체포장 발부로 판단될 경우 석방

·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 이
용시 1통화당 80원.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한국·조선·문화 일보·한겨레신문 인용>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 97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인권하루소식> 96년 12월분 총목차(779-796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779	12/3	1	교수·변호사 87년 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노동법 개악반대 청원서 제출/범민련 강순정 씨 4년6월 선고/전국연합 과천시시장 사건 의혹 수사촉구
		2	전주 인권영화제 압축속 진행, 전북대측 전기차단하고 교직원 1백명 동원/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합법화추진위 선언/주간인권호름(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780	12/4	1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음란물 탓/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안기부법 개정 반대
		2	<자료> 음란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781	12/5	1	SOFA 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 보고/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
		2	LG와의 전쟁, 불매운동 시작/민변등 성명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소개
782	12/6	1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반대 항의 확산/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요구
		2	양심선언자 범으로 보호해야,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조례안 발의/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보냅니다, 양심수 주소록/<자료> LG 그룹 대외비 문건에 나타난 노무관리 실태
783	12/7	1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된 구타등 가혹행위/양심수와 함께하는 천주교 인권주일/교회협 인권주간 선포/함운경 씨 재판 연기
		2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앞서/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사회원로 1백명 성명/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미특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각시 압수
784	12/10	1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장기수,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대법원 상고
		2	LG 해고노동자, 30일째 단식농성/ AI 세계인권선언일 성명, 국보법 및 사형제도등 폐지 촉구/민주노총 상경투쟁/주간인권호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3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785	12/11	1	보안관찰대상자 서준식 씨 돌연 출국 금지, 인권영화제 패배죄 추측/<현장스캐치> 여의도 두 단식농성장을 찾아- LG 해고자 이동열·성한기 씨, 전농 부의장 이장호 씨
		2	<자료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정책 마련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9주년 심포지엄 김영삼정부 장애인복지정책 평가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시민·사회단체 신한국당 항의방문
786	12/12	1	경원대 총장 '송광영열사 추모비탈취 사건' 공식사과/AI, 김대통령에게 장기수 복송 촉구 서신보내/광주교법, 영광해발전소 위험성 인정했으나 박재완 신부등에 집유 선고
		2	LA타임즈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무장공비글 PC통신 게재 첫공판서 검찰 피의자 윤석진 씨 전력시비
787	12/13	1	천주교사제단 안기부법 개악반대/KNCC 10회 인권상에 고 나카지마 목사 수상/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2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한 김형찬 씨/민가협 창립 11주년 기념 목요집회
788	12/14	1	국보법 학술토론회 열려,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문제 접근/경원대 송광영 추모비 재건립식, 장현구 1주기 추모식 열려/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2	후교부, 징계·탄압 여전/천주교인권위 양심수 석방 2만명 넘어/통계청 발표, 여성임금 남자의 59.9%
789	12/17	1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법 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2	모든 매체물 심의·규제, 청소년보호법 인권침해 우려/주간인권호름(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인권하루소식> 96년 12월분 총목차(779-796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790	12/18	1	휴먼라이츠 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부당해고 항의분신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안기부법 개악반대 실천불교승가회/매매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 명 정부민간단체 연대필요
		2	<기고> 한국언론,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장호순(언론학 박사)/김형찬 씨 분신기도 관련해 인권단체등 안기부 고발
791	12/19	1	국가보안법 전력자 홍성담 씨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엠네스티 초청장 무시/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등 집회/과천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2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딸 편지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던만..."
792	12/20	1	LG제품 불매운동 뜻을 올린다, 여의도 불매운동발대식/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글 게재/전국연합, 과천시시장 이성환 씨 사건 의혹 규명촉구
		2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 선회/전국연합, 임시국회 소집철회 요구/김성재 교수 장대협 의장에 취임
793	12/21	1	신한국당의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범민주진영 연일 투쟁/LG 해고노동자 이동열·성한기 씨 단식중단/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96년 여성운동 10대 뉴스
		2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 워치 1997년 보고서 ①/41일째 단식농성을 정리하면서, 이동열씨·성한기 씨 편지
794	12/24	1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교수 5백45명 반대성명 발표
		2	<양심수 강용주 씨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주간인권호름(12월16일-12월 22일까지)
795	12/26	1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견혀/대법 양심의 자유에 족쇄, 국민회의 이창복 의장 판결에 반대성명/서준식 대표 출국/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사내 집회 보장.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2	<자료요약> 휴먼라이츠 워치 1997년 보고서 ②/포철의 '협력작업 기존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796	12/27	1	새벽날치기꾼 YS, 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 불사
		2	<자료> 행려자 인권선언서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796	12/27	3,4,5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 보고서 심의/ 연세대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12·12 군사반란 및 5·17내란 심판대에/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세계가 경악한 연세대 사태/ 안기부법 개악//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침해자, 인권옹호자

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

지난해 11월 10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중 전세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교조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치료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후원구좌>농협 086-01-061598
문의 675-6181(전교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아직까지 96년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독자께서는 구독료를 납부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지 아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개약된
노동법·안기부법
완전폐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노동계의 총파업 확산에 맞서 재계가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한 고발조치로 나선 것 외에도 각 단위사업장별로 파업확산을 막기 위해 간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하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 12월 31일 집행에 들어갔다. 동산의료원은 당시 구속, 해고된 방영미(현 해북투위위원장) 씨를 상대로 티코 승용차를 차압했다. 동산의료원은 손배 차압에 이어 로비에서 벌인 노조측의 철야농성까지 손배 청구와 별 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았다.

또한 6일 기아자동차 조합원 1백여 명이 지지집회를 벌이려하자 경찰병력 5개 중대 및 백골단이 병원 로비까지 들어와 집회를 막았다. 이러한 병원측의 악랄한 탄압으로 노조원들은

많은 위축을 받았으며, 오는 9일 2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파업이 철회된 상태이다. 그러나 노조위원장 강희철(30) 씨는 6일 삭발식을 가진 뒤 7일부터 11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서비스 13명 연행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 김규석 분회장과 조합원 12명은 6일 대전 성모병원 노조 지원집회를 참석하려던 중 병원앞 횡단보도에서 전투경찰에 의해 대전 중부서로 강제연행되었다. 이들은 중부서와 동부서에서 오후 집회시 폭력사태에 참가여부에 대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후고구 노조 16명 중경상
이미 5개월 동안의 노조 탄압으로 잘알려진 한국 후고구측은 6일 오전 8시30분 조합원들이 출근하자 이들을 3층 강당에 감금한 채 파업가담 여부에 대해 자술서를 강요했다. 조합원을 감금해버린 회사측에 맞서

규탄집회를 갖자 회사측은 용역장패와 관리자 수십명을 동원해 집단폭행을 해 노계학 조지부장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16명이 상이 중상을 입었다. 회사측의 무자비한 탄압

대통령 회견, 인식부족·무대안·무책임

사회·시민단체 일제히 규탄성명

7일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현 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안제시가 전무하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정 전반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 커녕 자화자찬에 급급한 김 정권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97년 대선을 통해 현 정권의 오류와 실정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연합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노동자와 민주세력에 대한 거센 탄압을 예고한다”며 “남은 것은 노동자와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봉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민주세력들의 투쟁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은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한 연두기자회견에서 오히려 경악과 분노를 느꼈다”

에 긴급히 119 출동을 요구해 현장에 경찰들이 왔으나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후고구 해고자 4명과 관리자, 용역장패 몇 명을 함께 연행했다.

이밖에도 대우자동차 부산지부에서는 점심식사후 지역집회에 참석하려하자 회사측이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 몸싸움 끝에 정문을 부수다시피하고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며 “전국민과 함께 김영삼 정권과의 일전불사를 각오한 무기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밖에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범국민대책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도 논평을 내고 “김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는 7일 오후 2시 중요공무원 집회를 통해 김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규탄했으며, 총파업 결의를 제차 다졌다.

1만여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지하철과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선전물 50만부를 나눠주었다. 이에 따라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는 민주노총 홍보물을 읽는 시민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약에 항의하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농성중인 양심수들이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업, 민가협)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22, 충남대 총학생회장) 씨 등 양심수 13명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약에 대한 항의표시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교도소측은 이들을 징벌방에 수용하고 면회를 금지시켰다.

민가협은 “교도소 당국의 조치는 징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승시갑(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함)하여 징벌방에 수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6일 접견한 이원재 변호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씨의 가족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항의가 있자 교도소 당국이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송승의 외에 다섯 명 정도가 7일 현재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고 교도관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7일 송 씨의 가족 및 민가협 어머니들 10여 명은 오전 10시부터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날 교도소 측과의 몸싸움으로 송 씨의

어머니 김숙자(52) 씨가 심해 인근 한성병원에 실려갔다. 김 씨는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이날 밤까지 거동을 하지 못했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족측은 전했다.

한편 안양교도소 보안과 운영동 교사는 “징벌대상자는 송 씨 1명뿐이며, 징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징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일 뿐 아직 징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시간이 1주일로 이 기간중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고 교도소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29일부터 면회를 금지당해온 송 씨는 7일 현재 열흘째 조사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송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징벌방에 수감했다는 항의방문자들의 주장을 확인하려는 본지가 질문에 대해 운영동 교사는 “가족들 주장대로 쓰고 싶으면 써라. 바쁜데 길게 얘기할 수 없다. 더구나 법무부 출입자도 아닌 데다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법무부에 문의해라”는 식으로 거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전면무효!!!

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

지난해 11월 10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중 전세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교조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치료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후원구좌> 농협 086-01-061598
문의 675-6181(전교조)

주요 공판 안내

- 9일(목) 김재규, 백주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0일(금) 이승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명원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421호, 선고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주/간/인/권/호/름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말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 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5일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한 업체는 전국 3백75곳, 노동자수 3만4천1백7명/경북 영천경찰서, 농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전국농민회 경북도맹 의장 우익규 씨 구속

<26일>(목) 신한국당 새벽6시 단독으로 본회의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 법안을 7분만에 '전격 날치기' 통과/노동법 날치기처리에 항의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정부, 내년 4월부터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 3월부터 장애인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키로

<27일>(금)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 및 규탄집회/대한변호사협회,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헌법재판소, 노동쟁의조정법 31조와 30조3항 합헌 결정/노개위 공의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와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노동법 변칙통과에 항의해 위원직 사퇴

<28일>(토) 국민회의와 자민련,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29일>(일) 민주노총, 전국서 2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광장 결의대회/한국노총, 국제자유노련이 28일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혀

<31일>(화) 서울 고명상교, 교직원회 시간에 질문한 박차환 교사에 대해 학교장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

97년 1월 <1일>(수)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

<3일>(금)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투쟁 돌입

<4일>(토) 서울지법 정태학 판사, 한국통신노조가 인쇄 의뢰한 대통령 비단 유인물에 대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청한 압수 수색영장 기각

<5일>(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3일까지 전국 14개 교구에서 시국기도회 열 예정

<6일>(월) 재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발키로/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충원 간부등 30여 명 형사처벌키로 하고 7일 오전까지 소환장 발부키로/현충원등 2백50여 개 노조 23만 명 총파업 돌입

<7일>(화) 방송 4사 새벽 5시부터 총파업 돌입

개약된
노동법·안기부법
완전폐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운동시간에도 얼굴조차 볼 수 없네”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진성(33, 국보법), 이정훈(한국합성 파업관련), 이상훈(국보법) 씨가 교도소측이 양심수들을 분리수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7일 장 씨를 면회한 동생 장철희(28) 씨는 “이들 양심수들이 각각 다른 사동에 수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동시간에도 만날 수 없는 등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진성 씨는 저혈압으로 인해 단식시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교도

소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심수를 한 사동에 공동 수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사상·표현법인 양심수들의 특성을 인정해 이들을 공동 수용하거나 최소한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교도소에서 양심수간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해 문제가 발생해 왔고, 그 때마다 소내의 실력대결 결과에 따라 처우문제도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수원교도소에는 양심수가 3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수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자 외에 가족들이 신문광고를 내고 교도소장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지만, 교도소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경찰 대낮 8차선 점거 도심지 교통마비 주범

8일 오후 4시경 울지로입구 전철역 주변 8차선 교차로가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는 전경과 백골단 수백 명에 의해 수십분간 마비상태에 빠져버린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탑골공원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인도를 따라 행진에 나선 시위대열의 ‘차도점거’를 막겠다며 스스로 교통을 방해하고 나서는 우스꽝스런 광경을 연출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사무노련·병원노련·연노련 소속 사무직 노동자 4천여 명은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김영삼 정권규탄 결의대회를 가진 뒤,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공원정문 앞에서 행진을 가로막더니, 울지로입구 전철역 앞에서 행진대열을 제차 가로막았다. ‘도로교통을 위해 지하도로 건너가 달라’는 경찰 요구

에 시위대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위대가 지하도를 통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경찰은 시위대 사방을 차단하기 위해 왕복 8차선 4개 차도를 점령한 채 주변 교통을 마비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젠 지들이 먼저 시민편의를 무시하는구먼”. 한 노동자의 분노섞인 투정은 그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발전 미명하에 노동자 희생 말도 안돼 국제 인권단체 성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한국 국민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AI)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안기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한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는 “신한국당에 의해 개정된 노동법 및 안기부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체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한국정부는 남한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제발전의 미명하에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노동자들의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지금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에서는 ‘날치기 안기부법·노동법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서울 제일의 번화가답게 항상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명동거리지만 요즘들어 특히 발걸음이 물리는 곳은 바로 범국민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삼업은행 앞 테이بل 주변이다. 이 자리에선 범국민서명운동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와대 엽서보내기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김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분노와 비난에 이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노동자도 한 식구인데...

“김영삼대통령 아저씨께. 고3 여학생입니다. 어린 저지만 너무 화가 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농민=우리 식구들인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민생법을 새벽에 여당 참여로만 부결할 수 있는지...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건가요?”

“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라는 한 교인의 분노와 연세대 신과대 학생의 정중한 권유도 눈길을 끈다. “김영삼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세요”

신세대다운 신랄한 비꼼과 은유적 경고들은 분노마저 즐겁게 한다. “단풍관광, 꽃놀이는 봤어도 겨울철 국회의원들의 날치기 관광은 참 봤습니다. 관광버스 타시고 갈 데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낙동강에 수많은 엄지손가락이 떠난다는... 바로 대통령을 찍은 손을 모두 잘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물러나세요”

6일부터 8일까지 엽서보내기에 참여한 인원은 9백 명에 달한다.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에서부터 단호하게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그 표현은 다양하지만 질타와 비난의 목소리만은 한결같다.

“대통령입니까 깡패입니까. 야당 때는 안 그렇더니 변했군요. 실망이 대단합니다”

“독재타도, 민주화를 외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개혁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군요. 98년에 백담사 가시려나”

“각하도 내후년쯤엔 법정에 서게 될거요” “각하도 내후년쯤엔 법정에 서게 될거요”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처단할 것입니다”

“각오하고 계십시오. 97년 정축해에 우리는 기필코 당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정치하시기 힘들시면 물러나세요. 이상한 것(?) 하지 마시고...” 김 대통령은 이 시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듯 싶다.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민주노총·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함에 대해 8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 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경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화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 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정책마저 기업복지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 연석회의
일시: 1월10일(금) 낮12시
장소: 시청앞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
참가대상: 각계 사회단체, 범대위 참가단체, 지역 범대위
주최: 범국민대책위 연석회의
- 민주열사 박종철 10주기 추모의 밤
일시: 1월 14일(화) 오후6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
- 김시자(한일병원 노조위원장) 열사 초혼장
일시: 1월11일(토) 오후2시
장소: 마석 모란공원
-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강화개회
일시: 1월20일-1월30일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동북지회 사무실(교육비 1만원)
주최: 한국여성민우회(991-3657)
- 고 닷봄 문익환목사님 3주기 추모행사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통일맞이철천만겨레모임·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오는 17일(금) 오후6-7시 추모예배를 기독교회관 2층 대예배실에서 갖는다. 18일에는 오전 10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모여 마석모란공원으로 출발, 묘소참배를 가진 뒤 오후 5시부터 기독교회관 2층 대예배실에서 기념강연, 닷봄통일상 시상식, 문화행사를 갖는다.
- 6월민주항쟁 10주년 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주 소이전
주소: 종로구 당주동 19번지 삼한빌딩 502호
전화:732-0610/팩스:732-0607/통신 ID: 6월항쟁(나우누리)
- 전국연합 97년도 수첩판매에 관심!
97년도 전국연합 수첩이 제작과정의 차질로 늦게 제작완료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상과 달리 신청이 너무나 저조해 재정적 부담을 안게될 형편이라고 한다. 판매가격은 1백부 이상은 1천5백원, 그 이하는 2천원. 문의: 921-4090

■ 온라인(On-Line) 토론회: “노동법 안기부법 기습통과와 총파업”

민주노총, 범국민대책위원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은 우리사회의 중심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안기부법의 국회기습통과와 노동자 총파업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방식을 마련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2회> 날치기 통과된 새노동법의 문제점
일 시: 1월10일(금) 저녁 9-11시
통신망: 나우누리 대화방

<제3회> 온라인 시국토론회 “노동법 안기부법의 국회기습통과와 현사태의 해결방안”
일 시: 1월12일(일) 저녁 8-10시
통신망: 나우누리 대화방
문의: 855-1913, 866-2139

지령 800호
독자 여러분의 성원
감사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전세계 노동자여 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정부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내 각계 민주세력의 범국민적 연대 투쟁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관, 국제인권단체, 국제자유노련과 국제 산별노련, 각국의 노조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대투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국제연대투쟁은 국제기관의 항의방문단 입국 및 조사활동을 비롯해 '국제연대의 날'을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대사관 앞 항의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연대의 날 지정

항의방문단은 오는 11일 1차로 입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 국제자유노련(ICFTU) 에디화이트슨 사무차장, 국제금융노련(IMF) 바르첼로 사무총장 등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대규모 2차방문단이 입국해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항의방문단의 구성은 정부의 기습적인 법안 통과 직후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한층 강화된 행동이다. 1차로 한

국을 방문하는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27일 김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한국정부는 기존 노동관련 법률과 법령을 국제규범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OECD에 엄중하게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항의했다. 또한 "새 노동법은 ILO가 규정한 온사독재 시절의 노조의 자

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OECD와의 약속 어거 이밖에도 국제자유노련은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12월 28일 ILO 결사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바

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한국정부에 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그간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만해도 당시 노동법 개정 요구 및 구속자 석방,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이 국제기관을 비롯해 20여 개 국 노조에서 30차례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11일 중요공원!
날치기 규탄
범국민총궐기대회

'총파업 지지' 온라인이 뜨겁다

1백여 동호회 검은리본달기...총파업 지지서명 2천5백여명

천리안, 하이텔 등 컴퓨터통신 공간이 현 시국과 총파업을 둘러싼 논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범국민대책위,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은 '노동법·안기부법 기습통과와 총파업'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8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을 가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20여 명의 통신인이 참여해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민주노총 지도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차 토론회는 10일 「날치기 통과된 새노동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리며, 토론회 마지막 날인 12일엔 김문수(신한국당) 의원과 방용석(국민회의) 의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가 참석하는 시국대토론회를 열어 현 시국의 수습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철폐를 위한 통신지원단'(통신지원단)은 온라인 열기의 근원지이다. 통신지원단은 날치기통과가 있자마자 통신망마다 '근조! 민주주의'를 새겨넣은 검은 리본달기운동을 제안했으며, 파업지지 서명실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의 대표 장여경(27) 씨는 "통신지원단은 단지 제안을 할 뿐이며, 지금의 열기는 통신인들의 자발적 움직임일 따름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호응과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놀랍다"고 밝혔다.

1백여 개가 넘는 동호회가 속속 검은 리본달기운동에 동참했는데, 그 중엔 서태지 팬클럽, 패닉팬클럽, 비틀즈연구회 등 비정치적 동호회들까지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8일째 계속되고 있는 총파업 지지 서명운동에는 9일 현재 2천5백55명의 통신인이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해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당시 2주일 동안 1천8백62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밖에도 통신지원단은 통신망에 매일 총파업속보를 띄우는 동시에 국내상황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총파업소식>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내 각 단체의 성명서 및 투쟁속보 등을 영문판으로 신고 있다.

경찰 폭력진압으로 부상속출 노동자·학생 도심 가두시위

서충련 소속 대학생 1천5백여 명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등 2천여 명은 9일 오후 5시경부터 명동 일대에서 개정된 노동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각 대학별로 출정식을 갖고 도심 가두시위에 참가했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2시 탐골공원에서 전국 병원노련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시위에

함류했다. 이들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선 경찰에 맞서 들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날 시위로 건설노련 부위원장 유기수 씨를 비롯한 30여 명이 연행되었다. 또한 경찰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기아자동차 노조원 5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원 아무개 씨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부상자는 백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민변·참여연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목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간주해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대표 김중배)는 김기수 검찰총장 앞으로 노동계 총파업의 적법성을 밝히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또 서울지법 이상철, 신형근 판사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기타
12월26일	민주노총 14만명 총파업,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규탄 성명	민변, 민교협등 각계 규탄 성명	
27일	지하철·병원 파업 돌입/ 한국노총계열 4백여 노조 파업	천주교 시국기도회/개신교 목회자 30여 명 촛불기도회	시민단체 공동규탄집회	각계인사 50여 명 시국간담회
28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김영삼정권 퇴진 결의대회		
29일	부산지하철 파업/ 한국노총 15만 명 파업참가/ 민주노총 2만 명 여의도 집회	천주교 전국 3백여 개 성당에서 시국강론/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 70여 명 시국설교		인천시의회 의원 16명 규탄 성명/ 국제자유노련,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
30일			민변 철야농성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31일	민주노총 20만여 명 총파업		민변 철야농성	
1월1일			범국민대책위 시국농성/ 민변 철야농성	
3일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 7만명 파업참가			
5일	한국노총, 범국민대책위에 가입			
6일	현충린, 사무노련 등 19만 명 파업/ 민주노총 종묘공원에서 2만 명 집회 후 거리행진	천주교 지역별 시국기도회 돌입	보건의료단체, 시국선언문 발표/ 경실련, 날치기 철회 촉구	대검공안부, 민주노총 지도부 7인에 소환장 발부 회 촉구
7일	방송4사, 병원노련 등 공공부문 파업 돌입/ 총파업 22만명 참가			
8일	사무직 노동자 5천 명 결의대회 / 민주노총 15일 전면파업 선언		전국 36개 대학 법학교수 62명 성명/ 한국사회경제학회 교수 성명/ 민변,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각계원로 30여 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국제엠네스티,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비난
9일		개신교, 4백여 명 비상시국기도회 및 거리행진	문화예술계 3백33인 시국성명	재외동포, 날치기 규탄 광고 일제히 게재

■ 규탄성명 발표 단체(총집계 아님)

민주노총,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진보정치연합, 민교협, 민주적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과거청산국민위, 민변, 민가협, 총파업을 위한 민중연대투쟁위원회, 언론노련, 경실련,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전교조, 민예총,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 근 조 -
최종진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현대자동차 노동자 분신...위독

정재성씨, 날치기 원천무효 주장

10일 오후 4시45분경 울산에서 과업투쟁을 벌이고 있던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33, 의장2부)씨가 행진 도중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가운데 몸이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분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16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날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울산시협의회 조합원 2만여 명과 함께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경찰이 대열을 가로막고 최루탄을 난사하는 가운데 분

신, 울산제일병원으로 옮겨졌다가 5시 45분경 화상전문병원인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현대자동차측은 오후 5시부터 무기한 휴업을 공고했으며, 노조는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하는 등 울산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날치기 규탄
범국민총결기대회
1월11일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만남시다!

투쟁일지

- 1월9일
- 전북대 교수 90인, 한신대교수 70인 규탄성명
 - 이광택·박노현교수 등 "총파업 불법이다"는 의견서 발표
 -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서 2차 결의대회
 -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 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등 4곳 압수수색
 -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예고키로
 -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 등 4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 1월10일
- 전국 5백여 단체 대표자 결의문 채택
 - 오전 11시 향린교회서 '1997년 선언' 발표
 - 민주노총 광화문서 대대적인 차량시위 및 집회
 - 철거민, 노점상등 탐골공원서 생존권보장 촉구 집회
 - 범대위 주최, 전국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 개최
 - 불교비상시국회,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및 서명운동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가자! 오후 2시 종묘공원으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처리 이후 최대 규모의 가두집회 및 거리행진이 오늘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벌어진다. 17일간 총파업을 전개하며 투쟁의 최선봉에서 온 민주노총, 10일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를 통해 결집한 전국의 사회조직이 김영삼 정권에 대한 공분을 모아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깃발을 올리고 종묘공원으로 집결한다. 종묘공원 집회에 앞서 각 부면, 단체들은 사전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통해 종묘공원에 집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약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가두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역사 이래 최초이다.

10일 성공회 대강당에서 열린 비상시국연석회의는 사실상 국내 모든 민주양심세력의 결집을 의미하고 있다. 10일 현재 8백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연석회의에는 종교·법조·여성·인권·학계 등 전 사회부면과 전국 12개 지역의 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날 비상시국연석회의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의 돌입을 결의하고, 오는 14일을 범국민서명운동 총력집중의 날로 선포하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 및 범국민 행동지침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 부면별 투쟁도 긴박하게 진행되는데, 불교계가 13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국법회를 가지기로 하였고, 천주교는 13일 비상시국회의와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독교계도 16일 감리교를 시작으로 각종 단별로 시국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종교계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전국 28개 대학 2천여 명의 교수들은 이달말까지 각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밝혔으며, 여성단체연합은 '보통주부 1천인 선언운동', '지역별 신한국당 의원 소환운동' 등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제적 연대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는데, 비상시국회의는 "10일 국제자유노련이 선정한 국제연대의 날을 맞아 18개국의 노조가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농민운동가, 최종진씨 폐암으로 운명

지난해 4월말 폐암선고를 받고 투병해온 최종진(48,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충북지부 공동대표) 씨가 10일 오후 7시 5분경 서울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감찰계의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10일 남대문경찰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는 "병원노련 노조원이 성추행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그 과정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측이 현장에서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올린 보고서에서는 반대 주장을 하고나서 더욱 기막히게 하고 있다.

병원노련에 대한 압수수색은 9일 밤 10시50분에서 10일 새벽 1시10분까지 남대문 경찰서 형사 11명과 성북서 형사 1명 등 15명과 전투경찰을 포함해 1백16명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당시 병원노련 사무실에는 조합원 22명이 있었다. 병원노련측은 경찰이 이 과정에서 이화의료원과 서울대병원노조 여성조합원들을 희롱하고, '노동자영상사업단' 여성 취재기자의 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압수수색 당시 남대문경찰서 어느 한 경찰은 의자에 눌러 앉은 채 "여기 왜 왔어, 시집이나 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냐" "여기 있는 여자들은 모두 노처녀들이"라는 식으로 조롱했다고 한다. 이명숙(병원노련 간사)은 "간부들이 공무집행을 제대로 해라며 항의하자 또다시 노동자영상사업단 여기자의 엉덩이를 두차례 아무런 지시도 없이 성추행을 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병원노련측의 강력한 항의에 경찰측은 진성으로나마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감찰계의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10일 남대문경찰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는 "병원노련 노조원이 성추행

을 당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므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반대 주장을 폈다. 또한 보고서에서 "곽정태(수사과) 경사가 압수수색에 방해가 되니 촬영은 조금 떨어져서 하라고 손으로 밀은 것이다. 그 장소는 성추행을 할 수 없는 공개장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찰측의 태도에 분노한 병원노련측은 남대문서에 조사결과를 정식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추행 사실외에도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병원노련측은 또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노동법 개정관련 컴퓨터 및 관련자료'라 명시해 놓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 '94년 임금자료' 등 내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구 압수해 갔다고 항의했다. 심지어 압수수색 기간을 1월9일부터 2월10일까지 한달간으로 잡아놓은 것은 병원노련의 일상활동마저 전면 봉쇄하고, 총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 참가한 형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진, 김재석, 최재걸, 서부회, 김남진, 장호,곽정태(이상 남대문서), 이종호(성북서) 나머지 7명 미확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꾼을 찾습니다.

문의: 522-7284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노동자와 정부의 힘겨루기의 관건은 국민의 힘

-53년 제정된 이후 노동법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한 마디로 개악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5·16 군사쿠데타, 70년 유신정권, 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단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일정정도 개선된 듯 싶다. 또 한가지 특장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87년 노동법 개정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법 개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노동자였다.

-노동법 개정투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번 노동법 개정싸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추세다. 현대 자본주의가 자본축적을 해가면서 요구하는 부분은 새기술의 축적과 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이다. 이 자본의 운동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단적인 예로 실업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자본의 운동 및 논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복수노조를 상급단체마저 3년 유예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0년동안 민주노조의 요구는 복수노조 허용, 제3차 개입금지, 공무원·교사 단결권 등이었다. 이 악법은 군사정권 당시 유지·온존되어오던 것인데 이전 개악과정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현정권은 과거정권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 개악 중 간과하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조대표자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중 파업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는 조합원 총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파이다. 이 두 부분은 노동현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무노동무임금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차후의 문제다.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승산이 있는가
=김영삼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문제는 핵심적 사안으로, 재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적 중산층이 신한국당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긋났다. '고용불안, 안기부법 개악, 날치기통과' 이 세가지 사항으로 신한국당은 지지기반인 보수적중산층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강공략에는 없다. 대선까지는 전국 주도력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 역시 퇴로는 없다. 15일까지 파업은 확산될 것이며, 민주노총과 범대위의 투쟁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힘의 대결은 불가피하며, 그 힘의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세계의 인권① -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차별, 동등한 참여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이에 덧붙여 성에 기초한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목받게 되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맞고, 신체 일부가 절단되고, 태워지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강간당하는 현상이 소득 수준과 계층, 문화에 관계없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적노예, 강요된 임신, 착취와 매매, 가정폭력...이것들이 바로 가정, 사회, 국가 차원 모두에서 얼굴을 내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름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것인지는 강간의 경우만을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강간은 일상생활에서는 피해자인 여성과 알고 지내던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습게 저지르는 폭력이요, 여러 국가가 이용하는 고문의 수단이며, 무력 갈등 속에서는 주요한 무기이며, 이주노동자에게는 착취의 수단이며, 난민촌에서는 목숨을 부지하는 댓가이다. 구유고의 내전 속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고의적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나, 르완다에서 이루어진 공공장소에서 윤간 등은 모래알에 불과하다. 전세계 난민의 80%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위협과 매춘 강요는 특히 만연된 문제이다.

여성을 위협하는 가정폭력

법, 경제, 정치 등의 공적 생활영역만이 다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에 주어진 우선성은 공적 생활 속에서의 남성과 국가와의 관계를 겨냥하고 그속에서의 남성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많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고문의 희생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해 왔다. 즉, 평화와 조화가 가득한 피난처로 미화되는 가정에서의 폭력이 여성의 생애 전반을 위협하는 빨간불이 되었다.

94년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특별보고

관이 내놓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주목하고 있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의 결과로 여아나 태와 여아살해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0년이면 여성 1백명에 남성이 1백23명이나 된다는 성비과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정상대로라면 현재 인도에는 3천만의 여성이, 중국에는 3천8백만 명의 여성이 더 있어야 한다. 여아에게는 남자형제와 남편에 비해 음식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4억 5천만 명이 추정되는 여성들이 어린시절의 영양결핍의 결과로 발육이 부진하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한해 약 2백만 명의 소녀에게 여성 음핵 절제술이 더럽고 유해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르게는 1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세이하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조혼과 10대 임신으로 여성의 수명과 건강, 교육, 고용기회는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19세 이하의 나이에 첫 출산을 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으며, 1천 5백만 이상의 소녀들이 매년 위험한 출산을 하고있다.

아내는 구타와 심지어 살인의 대상이다. 영국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188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저질러진 살인건수의 1/4이 남편에 의한 아내 살해였다. 20세기의 통계에서도 이런 양태는 변화하지 않았고, 유사한 통계는 미국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이 살해된 경우 절반이상이 가족에 의한 살해이고, 방콕 빈민가의 기혼여성 중 절반 이상이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매를 맞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법체제는 가정폭력의 위력에 대해 무관심하다. 최근 들어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가정내 폭력과 강간, 성희롱 등

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인권'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92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 지점으로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책임성에 대해 전통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 여성인권의 중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이 구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되지 않는다. 이보다 25년 앞서 열렸던 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성(性)에 근거하여 인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76년 '유엔 여성 10년'을 계기로 사람들은 "왜 여성의 인권과 삶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가"고 묻기 시작했고, 그런 물음은 90년대에 들어서야 인권 논의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인권의 출현에 대해 한편에선 "인권"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인권의 보편적 적용을 의미하는데 새삼스럽게 '여성의 인권'을 끄집어 말하는 것은 어수선한 중복이자 과잉일 뿐이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앞서 살펴본 예처럼 여성이 당하는 폭력이 '보편적인 인권' '성의' 구분 없는 동등한 처우'라는 단순한 요건에 의해 구분되고 시정될 수 있는 것일까?

남성의 권리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부정당했을 때만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보는것에 그친다면, 성을 따라 구조화되고 분배되는 세계를 비판하고 개혁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인권이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강요된 침묵에서 절반의 목소리로 드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류은숙 교육실장】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 김영삼정권 퇴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비난여론에 국제사회까지 호응하고 나서자 정부도 당초 강경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한국의 보수언론들만이 사태를 호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여론의 비판에 대해, 조선·동아 등 보수일간지들은 "알지도 못하는 식의 역선전 기사를 신속하게 기획·보도하고 있다.

단'을 내리고 있다"며 심한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한한 존 에반스 경제개발협력기구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제단체 관계자들은 1년에 한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노동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보다도 이들이 노동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 "3급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며 국제단체를 '경솔한 간섭자'로 비하한 사실의 주장은 오히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설했다. 이 기자는 심지어 국제연대의 움직임에 '회원조직에 대한 상급단체의 예의' 수준으로까지 폄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제자유노련의 회원국이고, 특히 연간 3천2백여만 원 가량을 회비로 납부하는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상급단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이 기자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거론하며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에 관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평균 49시간에 달한다. 따라서 변형근로의 수용은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 노동법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린 것으로서 결

보수언론 사태에도 급급

12일자 「노동법과 국제적 관심」이라는 제하의 조 선일보 사설은 "국제기구든 여론매체든 먼저 정확한 사실인식과 상황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점잖게 충고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일방적 판

거짓 정보 유포

한편, 동아일보의 이기홍 기자는 13일자 3면 기사를 통해 "국제단체들이 노동법의 단결권 문제만 거론하고 변형근로·정리해고 등 파업의 최대 이슈엔 침묵하는 등 이들의 연대는 심정적 동조의 수준일 뿐"이라고

코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조선·동아일보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 또는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 왜곡'의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신노동자 격려 방문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금속노련(IMF) 마르첼로 말렌타키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6시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정재성(34·현대자동차 노동자) 씨의 쾌유를 빌었다. 정 씨는 지난 10일 노동법 개악에 항의·분신해안면부와 하반신에 2-3°,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다.

바로잡습니다

11일자 2면 박성인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무노동무임금이나~ 차후문제"고 한 부분을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역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이다"로 고칩니다.

투쟁일지 (1월11-13일)

- ▲1월11일 : 민주노총·범국민대책위 주최, 범국민권기대회에 3만여 명 참가된 명동일대서 밤늦게까지 가두시위/국제항의연대방문단 입국, 기자회견/전국농협노조 성명/1997년 선언
▲1월12일 : 명동성당 집회
▲1월13일 : 명동성당 시국기도회/전국 동시다발 '날치기 전면무효화 및 경찰살인폭력 규탄대회'/날치기 개악에 대한 보통주부 1105인 선언

주요 공판 안내

- 14일(화)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박소연·조윤미(국보법 찬양·교무),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진
오동욱·박행로(찬양·교무),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진
조선영(찬양·교무), 오후6시, 합의21부, 311호, 신진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략)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한 파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형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확고한 입장이다. 유럽인권위원회와 함께 유럽인권기구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유럽사회헌장 전문가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중략) 국내의 통설도 순수정치파업과 구별되는 경제적 정치파업, 곧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중략) 요컨대 국제노동법과 국내통설은 정치파업을 순수정치파업과 경제적 정치파업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누가봐도 경제적 정치파업임이 명백한 작금의 총파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법리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더욱이 선진국들에서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이 비폭력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이상 파업 지도부를 잡아넣지 않는다. 아니 잡아넣을 법적 방법이 없다. 파업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렇게 불태 파업행동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걸어 파업주동자를 잡아넣고 태연히 징역형을 때려 잠복취급하는 우리의 법집행관행은 이중삼중으로 국제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진적인 관행으로서 이번 사태에서 연출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정치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허용할 경우 혹은 이런 류의 파업이 부쩍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은 비상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조직이 불가능하다. (중략) 반면 정치파업은 금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파업에 대한 전면금압은 오히려 극한대립과 대량처벌의 악순환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 국제노동사의 경험이다. (중략) 특히 파업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능사로 알았던 지난날의 경험은 파업처벌이 별 실효성도 없으면서 사태를 꼬이게 할뿐이라는 교훈을 제공한다. (중략) 정부여당과 사법당국은 이러한 교훈과 법리 위에 굳게 서서 처벌만능주의의 법가적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1월 10일 발표된 의견서로, <법국민대책위원회 투쟁속보 8호>에 소개된 글입니다.

주간/인/권/호/름

(97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6일>

계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 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법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희씨 노동법 개악에 항의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징벌조치 당해/부산시민들 75% 노동계 파업지지

<8일>

전국 36개 대학 법학과 교수 62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무효화 및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철회 촉구 / '북한 밀가루 제공' 기사로 불구속 기소된 주간 <시사저널> 이고관 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대기업 노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단체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주노총 지도부 20명에 대해 범원출두요구 구인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세계 16개국 30개 도시의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서울 19위, 부산 29위 등 국내 대도시 하위권/파주농지개발조합과 주민에 따르면, 미군 제2사단 소속 탱크들이 콘크리트 타설된 굳어진 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5억3천여만 원의 피해 입혀/전국 16개 신문사 조합원 4천4백여명 투표결과 89% 찬성/ILO등 국제노동계 한국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항의확산/경철,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

<10일>

농민운동가 최종진(48)씨 폐암으로 운명/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안기부법 철회 거부표명/김수환추기경, 경찰투입등 강경대응 방침에 반대입장 표명/경남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정재성씨 노동법 개악에 항의, 분신·중태/노동법 개정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시국성명 잇따라

<11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게 각각 2백만원씩 지급하고 하시모토 총리의 서한을 전달한데 유감표시/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3만명 참가

<12일>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결과 노동계의 총파업에 국민 75% 파업지지/민주노총·한국노총등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TV 토론제의 거부/대검찰청, '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 전국 검찰청과 경찰에 내려보내/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 3백50여 곳 성당에서 주일 미사통해 노동법·안기부법 철회 강론/현충원, 경제성세의 분신과 관련해 황용하 경찰청장등 경찰지휘책임자의 해임과 정부 공개사과 요구/대전지법 어수용 판사 노동법 개정 항의시위에 참가한 (주)만도기계 노조 선전부장 임두혁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오후1시 여의도집회
-한국노총
오후2시 종묘집회
-민주노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12·26 날치기로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날치기 후 불고지 첫 재판 14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은 '간첩 김동식'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초점은 '함운경 씨를 만나 내가 대남공작원임을 밝혔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검찰은 김동식의 증언을 통해 불고지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김 씨는 수차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의혹을 부채질했다. 김 씨는 자신의 노동당 입당 시기를 90년에서 86년으로 번복하는가 하면, "당원번호를 기억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당원증을 받은 즉시 회수당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판사가 "진술서에 기재한 당원번호는 무엇이나"고 되묻자 김 씨는

"이제 기억났다"고 진술을 뒤엎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였다.

당원번호도 기억안나

피고인 함운경 씨는 "3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수차례 김동식과의 대질심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힌 뒤, 증인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증인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재판후 담당변호인 이정우 변호사는 "이번 간첩 불고지 사건은 조작이다. 경찰이 담당 수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안기부가 불고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역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번 안기부법 개정이 가져올 상황을 우려했다.

‘안기부 더 큰 조작도 가능’

95년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은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씨이며, 이중 허 씨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인영, 우상호 씨는 각각 구속만기와 구속적원번호를 기억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당원증을 받은 즉시 회수당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판사가 "진술서에 기재한 당원번호는 무엇이나"고 되묻자 김 씨는

언제냐"고 묻자 김 씨는 "모르겠다"고 했다가 곧 "전향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나서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 상황실차장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명동 향린교회에 차려진 대책위 상황실(775-3866)을 찾아갔다.

-개정 안기부법이 부당한 이유는

=20년 전 서승 씨, 10년 전 박종철 씨, 그리고 최근 김형찬 씨에 이르기까지 안기부(구 중앙정보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계속되어 왔다. 안기부법의 개악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언제 안기부로 끌려가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노동법에 가려 안기부법이 외면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현재 국민들의 투쟁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 요구를 넘어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으로 치달고 있다. 어느 하나가 더 강조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화작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책위 활동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현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은 계속된다. 다만 김형찬 씨에게 불법연행수사를 자행한 안기부 책임자의 처벌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

-김형찬 씨 치료상황과 치료비 문제는

=새살을 이식하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살을 도려내는 치료 때문에 김형찬 씨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치료비는 당연히 경찰과 안기부가 부담해야 한다. 도경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불법연행에 따른 사건이므로 법적·도의적으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헌파업은 헌법질서 수호위한 저항권의 행사”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을 터잡아 노동법 및 형법교수들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신한국당 국회법 위반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와 협력”을 기치로 내세웠던 “신노사관계 구상”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19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삼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

으로 가득차 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수의 헌법 파괴적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ILO가 권고했던 핵심과제인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유일노조강제조항의 폐지(복수노조의 허용), 제3차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중 어느 것도 수용된 것이 없다. (중략) 또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용불안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노동자 삶의 질 곧두박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악법이 ‘통과’되자 전국이 사상초유의 파업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명백히 불법”이란 입장을 취하여 검찰로 하여금 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를 옹호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른바 ‘정치파업’을 명문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입법례는 없다. 결국 파업의 목적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된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1983년에 개최된 제69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정치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략)

정치파업중 단결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가 있다. 1919년 성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1920년에 발생했던 카프장군에 의한 군사쿠테타를 총파업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헌정수호를 위한 총파업이 적법하다는 데에는 이문이 없다. (중략)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이른바 ‘순전한’ 정치목적 가진 파업으로서 사용자가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 정치파업으로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와 생활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법한 파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른바 ‘개정내용’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가득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계, 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치파업은 합법 변형근로시간제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 12시간까지 연

투쟁일지 (1월14일)

한국노총 금융·택시 등 공공부문 포함해 총파업 합류 /박종철 열사 10주기 추모제

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략)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체근로의 전면적인 허용조치로 말미암아 단체행동권이 형해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 규정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중략)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저항권의 행사인 것이다. (중략)

위와같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적인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나 적용했던 “위력업무 방해죄”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중략)

정부, 반역사적 노동법 반역사적 절차로 처리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역사적인 내용의 노동법 개정이 또한 반역사적인 절차로 처리된데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중략) 또한 ‘반개혁적’ 내용으로 가득찬 개악내용을 ‘개혁적’인 내용인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작태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 13 노동법·형법교수 일동 (강성태 교수등 30명)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 김영삼정권 퇴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양대노총 72만 노동부 10만 무려 7배차 노동부 총파업 집계 왜 그리 작은가

총파업 21일째를 맞은 15일 마침내 민주노총이 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의 파업돌입을 지시한데다 한국노총의 가세로 총파업의 양적·질적 규모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계에 의하면,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는 총 1천 9백개에 달하고 참여인원은 72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날 노동부

가 발표한 파업규모는 4백 92개 노조의 10만명전. 발표수치 간에는 무려 7배가 넘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지나친 축소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파업집계 방식은 각 단위노조와 산별노조의 보고를 토대로 하고 있다. 물론 양대노총에서 말한 72만여 명이 모두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

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파업결의를 밝히고 집행부 방침에 따르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파업사업장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병원노련은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했지만 응급실 등에선 일부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 조합원들이 파업 의사가 분명한데다 집행부 방침에 따른 근무이기 때문에 파업인원으로 집계한다는 것이다.

사통계부장은 “노동부는 주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파업인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파업 후 집에서 쉬는 노동자가 있다면, 노동부는 그를 파업인원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1시경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파업인원이 2만8천9백78명이라고 밝혔다. 잠시 후 낮 12시 여의도광장에는 4만명에 달하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노동부의 축소집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애청 이원영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소속 이원영(36·사업가, 애청 초대대장) 씨가 15일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애청은 작년 7월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결성과 이적표현을 제각·배포혐의로 간부 및 회원 13명이 대거 연행·구속당했으며, 1명이 수배를 받았다. 현재 당시 구속되었던 13명중 2명만 항소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15일 연행된 이 씨는 당시 수배를 받았던 인물이다.

한편 애청 회원 유영재(37) 씨는 “연행직후 이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원으로 이동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왔으나, 변호사들이 퇴근한 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다.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치형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정치형 법원장의 영장기각 기준 강화발언이 파업지도부의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 산재한 노동계 지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 시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

하면서 “행정적으로 상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이 상호연락을 취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치형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한편 “행정적으로 상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이 상호연락을 취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치형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반면 노동부는 지방노동사무소의 보고를 토대로 파업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이것이 축소발표를 하게 되는 이유라는 지적이 있다. 박석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회사에서 축소보고한 내용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축소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노동부는 실제 인원보다 축소된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축소보도는 노동자 투쟁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의 집계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10명이 조합하던 생산라인에서 5명이 파업을 하고 나머지 5명으로 라인이 운영된다면 파업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진우 조

●주요 공판 안내●

- 15일(수) 성두현의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중호의 10인, 특공처사,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속행 윤석진, 국보법, 오전10시, 4단독, 524호, 선고 정택진·고영기·김상일·김선태·박선영,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박병언·전민아·송민호·박공대,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성추행 파문이 항의집회를 비롯해 고소·고발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노련(위원장 박문진)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를 가졌다. 병원노련은 △성추행 당사자인 과장정태(57) 경사와 책임자인 김정호 수사과장의 처벌 △남대문경찰서 퇴진 △서울경찰청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집회를 마친 뒤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서울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16일 고소장 접수와 기자회견을 갖고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건발생 당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김수경(31·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씨의 증언이 있었다. 김 씨는 "경찰측이 솔직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측은 오히려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했다면서 나를 마치 성을 무기로 싸우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고 분개했다. 또한 그는 13일 연맹 간부 및 여연 대표들과 함께 남대문서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도 오리발을 내밀었다면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고소하는 등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한명희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대표와 한종련 연세대 사대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산업대 총여학생회장 정선희 씨 등이 참석해 연대를 약속했다.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들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사건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측이 안기부에 국보법상 불고지죄 성을 무기로 싸우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고 분개했다. 또한 그는 13일 연맹 간부 및 여연 대표들과 함께 남대문서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도 오리발을 내밀었다면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고소하는 등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투쟁일지

15일

- 민주노총·한국노총 총력집중투쟁의 날
- 병원노련 서울역서 성추행 규탄집회
- 전국 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 한림대교수 37명 『날치기 사과 요구』 시국성명
- 초중교교사 2천8백43명 『노동법 철회』 시국선언서명
- 경성대교수 85명 『노동법 철회』 시국선언
- 춘천교도소 시국사범 7명, 『노동법 항의』 시한부 단식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14일 저녁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자꾸 '10년'을 되새겼다. 10년전 아들의 뺨가루를 한탄장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마저 투쟁을 한다. 복사한 종철이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외치던 사람들, 흰 머리 수건을 둘러쓰고 울부짖는 어머니들-대강당 입구 로비 벽면에 걸린 사진들은 당시의 절실함을 전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10주기 추모제가 열리던 그 시각 파업 지도부가 머무는 명동성당은 경찰이 셋길까지 막아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은 최초의 문민정부답게 초기에는 인권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문사, 1994년 3월, 88쪽) 그런데, 이런 의지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김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당이 저지른 불법행위마저 부정하는 종철이를 죽인 독재자의 모습-그는 권좌에서 물러난지 채 10년도 못되어 감옥에 갇혔다-을 닮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때 그것은 이미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독재자일 뿐인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늘 국민의 총복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즉, 대통령은 근대적 인권개념조차 모르는 채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라고 오만을 부리곤 했다. 따라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인권을 학습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전근대적인 언행을 저지르는 것이리라. 필시 김 대통령도 세계인권선언조차 단 한번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이제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안기부법을 개악한 것이 이런 저항을 제거하는 선봉부대로 안기부를 활용하겠다는 심산이었지만, 6월항쟁에서 경험했듯이 이미 시작한 저항은 억누를수록 거세게 떠오른다는 진리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서 느낀 교훈은 국민적 기본권을 짓누른 권력자들은 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기본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제한 저항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
김영삼정권 퇴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회의원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해하는 내용의 통신정치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병선(김영환 의원 보좌관) 씨는 "권력구조상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

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폐쇄 새 시행령(개정안 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해하는 내용의 통신정치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병선(김영환 의원 보좌관) 씨는 "권력구조상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

며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또 "폐지시켜야 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오히려 검열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도둑질했다고 손 자르는 격 무엇보다도 "통신내용을 문제삼아 통신 수단까지 폐쇄시키는 것은 도둑질을 처벌하기 위해 손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이 시행령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반대론자들은 "통신범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수사기관의 전화도청, 통신검열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우려이다.

시민연대는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전기통신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통신할 권리에 대한 제한은 사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스팸의 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화

및 PC통신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18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이 될 경우, 2월 1일 이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날치기 통과 위헌제정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정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홍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폭행현장 목격한 외신기자를 찾습니다 키 170cm, 머리 노란색, 젊은 남성 16일 오후 6시10분경 을지로 을지병원 앞

16일 을지로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외신사진기자를 찾는다.

인천영상집단 회원인 노병권(30) 씨는 16일 오후 6시 10분경 을지로 을지병원 앞에서 민주노총의 시위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던 중 백골단 5-6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뒤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뺏겼다고 밝혔다. 노 씨는 "백골단이 끈봉으로 때리고, 쓰고 있던 방독면을 벗겼으며 얼굴사진을 촬영한 뒤 '또 나타나면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키 170cm 가량의 외신사진기자라고 밝혔다.

뺏긴 비디오테이프에는 경찰이 시위대에 돌맹이를 던지는 장면, 전경이 시민을 구타하며 연행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 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양일간 전국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3%가 현 사태를 야기시킨 날치기통과된 노동법 무효화에 동의하고, 80.8%가 노동법 재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93.8%가 현사태를 공권력 투입이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와 여당의 새벽 날치기통과에 대해 국민의 85%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고 근로의욕이 감퇴해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70.9%가 응답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시국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국민의 79.6%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보았으며, 가장 큰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44.7%) 및 국회 등 정치권(42.9%)에 있는 것으로 87.6%가 지적했다. 현시국 상황에 대한 책임이 파업노동자에게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으며, 국민의 65.6%가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령이 낮을수록 파업지

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가 82.6%를 30대가 73.1% 50대가 35.9%로 나타났다. 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부분에 50%가 넘는 국민이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정당지도부분에서 신한국당이 12.8%로 떨어진 것으로서 재확인되었다. 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는 노동법 파업 이전 30%, 노동법을 날치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 오보에 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의 회(공동대표 이효재외 2인)는 15일 오후 지난 11일 일본 민간기금 지급강행과 관련한 언론사들의 피해자 인터뷰 내용보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x·c·o 신문등과 o방송에서 보도된 박순할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박할머니가 정대협 등에서 모금한 돈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며 "할머니의 발언을 단체 및 관계당국에 확인조차 없이 그대로 실은 것은 정대협 등 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투쟁일지

- 15일
 - 경찰, 시위노동자 150여명 연행
- 16일
 - 현대정공(창원)사측이 낸 '정의행위금지차처분신청'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
 -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에서 결의대회
 - 민변,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 목사 1천여명 『안기부-노동법 철폐』 시국선언
 - 서울대교수 1백28명, 『노동법 무효』 시국성명
 - 전남 영암서, 오형근 씨등 삼호조선소 노조간부 3명 업무방해혐의등으로 구속

기 통과시키던 26, 27일 조사에서 21%로 나타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급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

15일 오후 2시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철폐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정화(54·국민회의 시지부 자료국장) 씨가 저녁 7시30분경 최루탄

가스를 피해 집회참가자들과 홍명상가 인근 매점에 피신중 전경들에 끌려나가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10여명의 전경에게 곤봉체제와 발길질을 당해 이마가 깨지고, 목뼈에 이상이 생기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16일 현재 동산병원에 입원중이다.

국민회의 대전지부측은 매점에 피신한 사람들중 유일하게 김 씨만을 끌어내 구타한 점을 문제제기하며, "이는 대전지부가 14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반대 성명을 발표한 직후 벌어진 것으로 보복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대전지부측은 16일 오전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식 경찰청장으로부터 치료약속 및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서명이 드디어 5천 명을 넘어섰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참가한 사람도 1천 명이 넘었다. 통신지원단 보고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현재 1천68명이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동참하였고, 외국인 서명도 2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서명은 20개국에서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7명, 일본 27명, 캐나다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국가중에는 남아공,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도 눈에 띄었다.

특히, 이번 노동법·안기부법 통신보도에 미 행정부가 1백47번 접속했으며, 미군사기관에서도 90번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민대책위로 투쟁기금을 보냅니다.

계좌번호: 서울은행 18904-3653100(예금주 박석운)
전화:777-4014/5 팩스:777-4016 PC통신:bgdw(천리안)

오늘은 노동법·안기부법
전면 무효화를 위한
국민 총결기의 날
전국 20개지역 동시다발
집회(서울은 종묘공원)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사건, 유서대필 사건, 12·12 기소유예 사건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영모 씨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일가 사건은 송지섭(당시 59세) 씨 등 일가 29명을 간첩단으로 조작발표한 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관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과 사건의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TV토론 제안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쌓기 위한 고도의 기만책이었음이 드러났다. 16일 이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노동계 대표와의 TV토론을 제안했던 신한국당은 17일 민주노총이 '권영길 위원장과 이 대표가 참석하는 생방송 TV토론'을 제안하자 이를 공식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을 하룻만에 뒤집었다.

이 대표는 연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TV토론을 거듭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날치기 악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했다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기 악법을 기정사실화하지 않는 공개적인 TV토론을 수용한다"며 "책임 있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권 위원장과 이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생방송 TV토론"을 제안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에 대한 신분보장을 약속해

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영장이 발부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신변 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TV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공개적 TV토론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대부분이 사전영장 발부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를 구한다면 도대체 어떤 노동계 대표와 TV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김 대통령이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을 여러 차례 청와대로 초청해 대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처사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신한국당이 언제 어디서든 노동계 대표를 만나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모두 정치쇼요 대국민 호도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명동성당에서 권 위원장과 이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TV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무죄처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대법원 판결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 획기적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90년대 대표적 인권피해 사건인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서울형사지법 재판부에 계류됐을 때 이영모 씨는 서울형사지방법원장으로 재임중이었다. 사법감시센터는 "수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이 사건에서 의풍을 차단하고 판사들의 소신 판결을 격려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이 판사의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2면으로 이어짐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17일로 예정됐던 윤석진 씨와 홍성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각각 2월12일과 1월31일로 연기됐다.

윤석진 씨는 PC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검찰이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기로 한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백승현 변호사(민변 사무국장)를 소환하려 하자, 민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검찰에 백승현 변호사가 정식으로 입건된 것인지, 입건되었다면 무슨 혐의인지, 그에 대한 소환이 참고인으로서인지 피의자로서인지를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검찰이 입건 여부 등을 밝혀 정식으로 소환을 하면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서울지검 공안부 주성영 검사는 백 변호사에게 15일 오후 출석할 것을 전화로 한 차례 요구했으며, 언론보도와 달리 17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언론에 사실확인없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백 변호사는 "주검사와의 통화에서 '입건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화 소환이고, 또 민변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님'을 전달하고, 다음 주초에 열릴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일보 16일자 사회면 기사는 "검찰이 백 변호사에게 16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통보했으며, 검찰은 백 변호사가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대북 쌀지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민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민변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쌀을 허락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만을 통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기 위해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에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민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회원들의 성금 1천2백20만원을 모아 북한에 쌀을 보내기로 한 뒤, 북미회담이 타결되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국면이 왔다고 판단, 지난 14일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이를 기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통일원이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한 근거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며, 평

화적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위헌제정 등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면에서 이어짐

또 이영모 씨는 95년 1월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자격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기소편의주의상 검찰이 12·12사건에 내린 불기소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법감시센터는 "이 씨가 잘못된 검찰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대변했다"며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폭주하는 현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영모 판사는 여러 요건을 거치면서 법정시설 견학 허용, 소송관계자 판사실 출입제한 결정 등 합리적이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검약한 사생활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이 씨의 언동에 비추어 독립적이고 합리적 재판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책무에 적격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 사법감시센터의 결론이다.

한편, 사법감시센터는 16일 대법관으로 임명예정된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에 대해 "기본권 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별다른 물의를 야기한 적이 없다"며 "무난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 인권간행물 ◆

- ◇현장에서 미래를 1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주요내용: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좌담회/변화하는 영국노동당 그 배경과 전망 등 175쪽
- ◇민족예술 1월호-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법적으로 본 성표현과 음란(죄)/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특집-민족예술대학 등 140쪽
- ◇통일맞이서신 1월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 주요내용:장수함 사건 사과와 97년 통일정세/겨레말사건 소개/통일일지 등 31쪽
- ◇세상열기 1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주요내용:1997년 8대분야 핫이슈와 개혁과제/광고가 인생을 가르친다-광고문화론 등 118쪽
-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주요내용: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등 34쪽
- ◇함께가는 여성 1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비참한 교육현실, 대안은 어디에/민우회 부문별 한해살림 돌아보기 등 19쪽
- ◇국제엠네스티 1·2월호-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인권외식의 향상을 위하여/ 사형제도 합헌판정에 대한 논평 등 27쪽
- ◇고난함께 48/49 합본호
· 주요내용:인권의 세대론/ 좌담회 '인간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 등 58쪽
- ◇후원회소식-민가협(763-2606)
· 주요내용:분단의 최장살을 녹여주는 힘/ 양심세력이나 설 때다/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 등 23쪽
- ◇전국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자료집
· 주요내용:날치기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사업계획서/ 비상시국연석회의 참가단체 명단/ 범대위 자료집 등 57쪽

범국민대책위로 투쟁기금을 보냅니다

계좌번호: 서울은행 18904-3633100(예금주 박석운)
전화 777-40145 팩스 777-4016 PC통신 bgdw(천리안)

안기부 인권유린 근절 위한 김형관 주원의 밤

19일(일) 오후 2시-8시 경희대 서울배움터 복지회관
모임구좌: 국민은행 076-21-0506-539 이병현
문의: 0331-230-2800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
김영삼정권 퇴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파업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총파업투쟁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다.”

한국노동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24일만에 민주노총의 전술 변화에 따라 소강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민주세력이 날치기로 촉발된 '악법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열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민교협·전국서명교수모임이 주최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시국대토론회는 민주노총의 전술변화 이후 열린 최초의 공식토론회로 기간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범대위, 민노총 연대 기관 민주노총측은 1단계 총파업을 통해 상당한 자신감을 획득했지만 힘의 한계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민주화와 삶의 질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커다란 성과”라면서도 “시민·사회세력의 지지와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이 성공적이었다는 전반적 평가 속에서도 남구현(한신대) 교수는 전술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남 교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완급조절이 다른 시민사회 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구사된 것은 잘못이며, 범대위 활동 또한 수세적인 합법투쟁기조를 고집함으로써 투쟁의 위력을 경감시킨 것과 민주노총과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정치세력화, 산별조직 건설로 악법 철폐라는 과제 외에도 이번 총파업투쟁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지적이었다. 박노현(방송대) 교수는 “이번 투쟁의 최대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단초를 만드는 것과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한 무기 '파업'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당장 민주노총의 전술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망과 우려 등이었다. 임영일

※ 지난주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홍수 부장판사)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일한 무기인 파업을 포기할 경우,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기부법 논의 활성화 필요 한편 박노현 교수는 “정리해고·변형근로 등 이른바 '3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논의의 교원·공무원 단결권등 '3급'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기부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환기시켰다.

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언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채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흘만에 퇴원, 현재 통일치료중에 있다.

군산교도소측은 그동안 이 씨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맞서 이 씨는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군산교도소 의무과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가 원래부터 앓고 있던 질병을 제외하고 수형자의 치료는 관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말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연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동주 씨 수술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95년 7월 시위과정에서 최루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이 씨는 95년 11월 5·18특별법 제정 시위 등의 이유로 구속,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우측눈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이 씨와 가족들이 인천구치소측에 출원 수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군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씨의 가족은 아직까지 이 씨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통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 씨는 녹내장 치료를 위해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씨의 어머니 김영조(50) 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제때 병원에 보내주고 수술을 받게 해주었다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교수 민주노총·법대위 한목소리

오늘 열리는 4자 영수회담에 온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 △3월 1일 이전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두 법의 백지화 및 현시국관련 구속·수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21일 영수회담 전에 야당 부총재를 만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백지화 및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한 고소·고발등 사법처리를 중지할 것을 촉구

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법 백지화에 같은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날치기 노동악법의 전면백지화는 물론 노동법개정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옥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만 이뤄질수 있는 징발이 74년도에 이뤄진 것이 타당하지 징발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철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한 땅을 원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공판 안내

□ 21일(화)
강순정·반상균(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2호, 속행 서다윗·김우현(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신성필·한현수(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고대규·김광수(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송호준(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영(국보법 탈출등) 오전11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순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주/간/인/권/호/름 (97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13일>

전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폐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금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학 형법·노동법 전공 교수 30여 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14일>

박종철 10주기 추모행사/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김병수 씨 파업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일본 노동성, 남녘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중

<15일>

민노총·한국노총 집회,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을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임된 전대주시 여성공무원 신모 씨 대고법에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출/한국은행 노조, 금융노련이 총파업 총력투쟁 의면하고 있다면 탈퇴선언/서울·부산지하철과 일부 지방 버스노조등 파업돌입/법무부, 국내 방한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단등 국제노동단체 지도자 4명에게 총파업에 관여하면 강제추방시키겠다고 경고/용인 외대 동아리방을 국군기무사 군인들 사찰하러다 들통나/87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2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16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국 25개 언론사 총파업, 조선·동아·중앙일보 불참/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성인남녀 1천명중 80.8%가 노동법 재개정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 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지·누설)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이기순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에게 살인죄 적용해 징역15년 선고/필리핀, 전자주민증제도 시행놓고 정부·인권단체간에 공방전/ILO 노동관련 7대 기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신법 새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보통신부에 제출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날치기법 철폐위한 서울역앞 대국민 서명운동/현 파업관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40) 씨, (주) 한국중기 해고노동자 장진호(34) 씨 구속

<19일>

민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보통신부에 제출

민주노총 수요일파업
14:00 전국 동시다발
집회, 수도권은 종묘
집회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걸으면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의 고소·고발 416명

한달 가까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분노의 물결을 잠재울 묘안이라도 되는듯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도 극심하다. 따라서 현시국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총파업 26일째인 20일 현재 고소·고발 조치를 당한 노동자는 8개 산별연맹 57개 노조간부로 4백2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임식(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병수(한라중공업 노조위원장) 씨 등 8명이 구속되었다.

또 권영길 위원장 등 중양지도부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 외에도, 기아자동차, 현대미포조선등 핵심 파업사업장의 대표와 간부들이 수배·구속상태에 있다. 현장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언제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구속자 석방과 고소·고발 취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집회 탄압, 부상·구속 속출 연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를 좌우탄압, 경찰봉구타 등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3백여 명이 연행되었고, 이중 1명 구속, 4명 구속영장 청구, 40여 명 불구속 입건, 1백50여 명이 즉심에 회부됐다.

또 경찰의 폭력적 집회해산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소·고발 조치를 당한 노동자는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21명이 머리 부상을 입었는데, 울산 현대자동차 조용형 씨는 머리를 무려 56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10일 '민주주의와 국민생존권 수호를 위한 울산 노동자 시민한마당' 집회를 마친 뒤 행진대오를 경찰이 저지하는 데 대해 항의하던 울산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 씨가 분신해 30%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강남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3개사 38억 손해소송 서울대병원·대흥기계 등 13개 사업장에서는 파업행

위에 대해 결근처리 또는 무노동무임금처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덕부진흥·아남산업·효성중공업 등 3개 사업장에서 노조측에 총 38억원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맡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사안이 여야간의 타협에 맡겨질 경우, 결국 지리한 정치흥정을 통해 다수당인 신한국당의 의도가 관철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석은 씨는 "여야 타협에 맡길 경우, 법 조문 한두개를 고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수회담에 앞서 20일 열린 시국토론회에서도 '여야 흥정 국면'으로 옮겨가는데 대해 잇따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의 손해소송을 하고 나섰으며, 금강개발은 63억 손해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삼풍직물에서는 회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한동규 위원장등 13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기업주들은 노조탈퇴 압력, 폭행, 불법대체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파업과 괴에 눈을 밝히고 있다.

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온 투쟁의 나무리를 여야의 절충에 넘겨주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구현(한신대) 교수도 "정치권에 해결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계 사회세력이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조직적 결함을 통해 대중동력을 깨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영수회담 결과를 접한 뒤 '총파업 방침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악법의 완전무효화와 노동법 재개정은 물론, 고소·고발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및 손해배상소와 징계 철회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2일 수요일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8일 4단계 총파업 등 향후 투쟁강도와 일정을 재조정해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 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김영식(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는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후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사전 검열과 사후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통제와 감시의 강화!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보화이고 민주주의인 것인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신권 제한과 박탈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상과 역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꾀변일 뿐이다. 지금까지 통신 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1천 2백72건의 안기부 감청을 포함한 4천여 건의 전화감청과 15만6백여 건의 우편검열이 자행된 사실을 뒤로하고라도, 작년 한해 동안만 통신상에서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관련 18명, 보안법 관련되어 33명이 수사 혹은 구속수사를 당했으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감청의 증거자료로 등장하는가 하면, CUG(폐쇄동호회)까지도 표현상의 이유로 폐쇄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국민의 통신기본권 침해를 뻔뻔스럽게도 공개적으로 자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윤리위에게는 명실상부 국민의 발언을 통제하는 정부의 검열기구로 자리잡게 했다.

2년새 전화감청 4천건 우편검열 15만6백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는 참혹하다. 사회단체의 CUG 폐쇄와 전화, 통신의 중단조치는 수사기관 혹은 윤리위원회의 '감정개입'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통신공간상의 동호회와 개인은 언제든지 폐쇄 또는 통신의 권리를 박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고 사회의 의식있는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되어 통신공간은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96년 10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 주체는 '수사기관과 윤리위'였으며, 국민들에게는 통제와 감시, 그리고 통신제한과 박탈만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신공간은 상품판매와 정부의 홍보공간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이할 날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예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분리가 엄격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 칭해 왔다. 특히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사안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의 견제와 통제 이후에 엄격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검열기구인 윤리위에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초헌법적, 반민주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이기를 원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엠네스티 피에르 씨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또 "안기부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개정 안기부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엠네스티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줄 것 △노조간부들을 체포하지 말 것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양심수에 대한 처우를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 등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정부가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며 OECD측에 한국정부의 국제적 노동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동시에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노동법이 OECD 가입 전에 통과했다면 한국의 가입이 결정됐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일 OECD 사무총장 도날드 존스턴은 한국대사에게 회원국들의 불만을 전했고, 특히 노동운동지도자에 대한 구속에도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서 민변사무국장 백승현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왔다. 이에 민변은 "정식입건된 것이 아닌 내사사건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출석답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미 내용도 서면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판 안내○

- 22일(수) 양한용(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진
 - 23일(목) 이성숙(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교 배태연의 4인(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선교
 - 24일(금) 하영준(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황윤미(국보법등) 오전11시, 5단독, 519호, 속행 윤용배(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강병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설중호의 10인(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노동법·안기부법 계약 철회! 김영삼정권 퇴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1일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아무개 씨가 김수환 추기경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천주교인권위 명의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추기경계에서도 알고 계시나? 위에서 알면 좋지 않을 텐데..."하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가 문제삼은 스티커 제작은 하지도 않았다며 "어떻게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김 추기경의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수 있나"고 항의했다.

김추기경 차 트렁크 수색도 안기부·경찰등 수사기관

에 의한 종교사찰은 일상적으로 이뤄져왔다. 지난 13일 명동성당에서 가진 시국기도회 때도 경찰측이 일반인은 물론 신부와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중부경찰서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항의하자, 신도들에 한해 명동성당으로 들어 보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전용차 트렁크까지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트렁크까지 수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 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무부의 심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박 씨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고 갱신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을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역시 보안관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스티커 배포 저지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제작한 2종의 스티커 '문민독재 싫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 습니다'의 배포를 막기위해 경찰과 안기부를 동원해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상봉 사무국장에 따르면 "서울·부산 지역에서 경찰측이 본당으로 전화를 걸어와 '불법 스티커 부착은 도로교통법등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가능
22일 천주교인권위는 안

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안기부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안기부법상 직권남용금지등의 조항을 근거로 민형사상 고소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일회담 개최 반대 정대협, "일본사회 우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지난 11일 국민기금 강행지급 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사죄를 거부한 이상 한국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25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거부를 촉구했다.

정대협은 22일 유종하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항의서한에서 "한일 무회담에서 일본정부에 일련의 사태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정부는 거절당했다"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수락하는 것은 한국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민운동가 김홍겸 씨 사망

95년부터 암으로 투병해 오던 김홍겸(37·전 전국민민연합 연대사업국 차장) 씨가 21일 밤 11시경 운명했다.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노제: 7시30분-8시 연세대 신과대 앞.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판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상을 단 무지(단순, 무식, 과격의 성품을 가진 운동가를 지칭하는 속어)로 단정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일에도 목을 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달리 흥분하는데 시간이 필요없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는 쉽게 흥분하는 만큼 의욕과 정열로 넘친다.

어딘가에 인권 사건이 발생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비해 몇십배나 큰 사명감으로 현장을 뒤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한다. 때로는 변호사들에게 법률적인 조언도 듣고, 때로는 선배 활동가들의 자문도 구하면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추리해간다.

95년말 발생한 경원대 장현구 씨의 분신과 그로부터 이어진 학교의 탄압,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구속,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는 성남지역으로 무시로 오르내렸다. 분신현장에서부터 대공분실, 법원, 변호사 사무실로, 인권단체 사무실, 농성장으로 그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그는 결코 단무지가 아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인권운동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운동하는 것은 곧 죽음일 수도

그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고상판(28)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다.

하지만,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그는 결코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강원도 속초의 동우전문대는 학원 폭력이 극심했던 학교였다.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은 대학 안에도 깽패들이 대낮에 칼과 낫을 들고 설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런 폭력에 맞서 이기는 것은 용수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늘 인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었다. 학교 학생처가 바로 학원 폭력배의 조정실이었고, 그의 사주를 받은 폭력학생과 시내 깽패들한테 때로는 설악

산으로 때로는 속초 바닷가로 납치되어 '죽지 않을 만큼 얻어 터지곤' 했다. 그때마다 그도 칼과 낫을 쥐고 싶었지만, 학생처와 총장실 점거, 꾸준한 학우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 조직활동으로 이를 극복했다. 그러던 89년 말 드디어 이런 폭력을 뚫고 자주학생회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곧바로 김용갑 총학생회장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91년 정연석 동아리연합회장의 분신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운동하는 것은 곧 죽음일 수도 있는 공포 속에서 그는 도리어 단단해졌다.

전국연합에서 인권운동가 꿈키워

그런 그가 속초를 떠나게 된 것은 91년 김기설 열사의 분신 사건 이후였다. 정연석 씨 분신 사건 당시 김기설 씨는 전민련에서 활동하면서 서준식 당시 전민련 인권위원장(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고상판 씨의 끈질긴 요구에 결혼식 주례도 맡았다)과 함께 조사작업과 항의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이를 계기로 서 씨와 인연을 맺게된 고상판 씨는 이후 전민련 활동과 유가협 활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의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93년 5월 사랑하던 후배(현재 아내)와 사이에 2세가 생기면서 복학을 하고,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학교를 마친 후 잠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벌이를 1년 남짓 하다가 들어간 곳이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였다.

처음 그는 그곳에서 인권운동가로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갔다. 하지만, 처음엔 너무도 절망스러웠다. 인권운동이 구속자 뒷바라지와 기껏 구속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운동판의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저는 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이 또 묻히는구나, 저들은 치밀하게 사건의 은폐를 획책하는데, 우리는 잠시만 흥분하고, 아주 소수만 사건을 잊지 않는 정도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리로 물러가고..."

그럴 때마다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어느 열사의 아버지가 한 고백이 그것이었다.

"4·19 때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싶었고, 5·18 때는 무관심했으며, 6월항쟁 때는 방관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오늘 내 아들의 죽음을 맞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무지와 무관심, 방관이 오늘의 담당할 정도로 담보 상태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형찬 씨 사건으로 바뀐 나날들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인권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거기엔 우선적으로 인권운동가들에게 책임이 있지요. 언제부턴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만 매달리고, 곧 지쳐 하고, 합리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부분에 얽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직한 그런 활동가이고 싶다는 그의 꿈은 의외로 단순하다.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 그런 인권운동의 목표가 아니겠냐고 한다.

그는 요즘도 바쁘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있는 향린교회의 한 구석에서 안기부의 불법적인 연행에 항의해 분신한 김형찬 씨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직은 다들 어지러지 않은 활동가지만, 그의 바쁜 모습에서 열악한 한국 인권운동의 앞날을 개척하는 희망을 본다. 그는 사무실을 지키기 보다는 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건강한 활동가이기 때문이다.

투쟁일지

- 20일
 - 약사 558인 시국성명
 - 불교 비 상시국회의
 - 부산여성선언 발표
 - 부산진구 주민 222인 선언
 - 충북 보통주부 620인 선언
 - 서명교수모임, 시국대토론회
- 21일
 - 범종교인 시국행진
- 22일
 - 민주노총 14만명 파업
 - 대한성공회 사제단 시국기도회

오후6시 명동집회 (사무노련·대학노련·한국통신)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의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고, 선고 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상자는 주거이전을 하거나 1일이상 국내의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찰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악용의 우려마저 낳고있는 실정이다.

양심수예겐 부적당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재범의 방지를 막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그 사회의 가치관을 획일화 시키려는 부분마저 지적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홍섭)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에 집행유예 3-2년,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경도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으로 의견을 재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수령 통한 재조정 필요

○행사와 동정○

- '97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일시: 1월 28일(화) 오후 2-5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 주제발표-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상(임재경, 언론인)/대선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역할(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12-3317)
- 21세기 노동운동을 내다본다
 - 일시: 1월 28일(화) 오후 2시30분
 -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 내용: 1부 정세전망-정치 및 이데올로기(김세균 교수) 경제(김성구 교수) 작업장(강수철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운동(노조간부)/ 2부 종합토론-노동운동 발전방향(김상곤 교수)
 - 주최: 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연구소(882-0643) 산업노동학회(882-0637)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창립1주년 기념식
 - 일시: 1월30일(목) 오후 6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문의: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 6월항쟁10주년사업법국민추진위 사무실 개소식
 - 일시: 1월30일(목) 오후 5-9시
 - 장소: 6월민주항쟁법추위 사무실(732-0610)
- 김태홍·이현치 씨 출국
 - 비전향장기수로서 96년 8월 15일 출소한 이현치·김태홍 씨 일본으로 출국. 김태홍 씨는 23일, 이현치 씨는 가족과 함께 26일 출국한다.

동티모르 민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한 민족의 죽음』(Death of a Nation) 판매중
가격: 1만원(76분짜리/단체주문시 할인판매)
문의: 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한 달 가까이 끌어오던 총파업국민이 일순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총파업투쟁 양상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 한달간 노동진영의 총파업 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한 곳이 민주노총이었다면, 양심적 사회세력을 대표해 투쟁을 이끌어 온 곳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의 완급조절에 따른 소강국면 속에서 악법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지속·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요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인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씨를 만나 총파업투쟁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실질화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총파업투쟁을 범국민적 저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범국민대책위의 몫이다. 셋째, 야당과의 연대투쟁이다. 기회주의적 야당이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들이 자신들의 성과물만을 챙겨가지 못하게끔 견인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연대투쟁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정부가 국제노동단체 대표에게 추방위협 운운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해외토박이였다. 파업의 강제진압 등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국제적 불매운동이나 하역거부, 경제봉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사회각계 항의 범국민적으로 확산”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1차총파업투쟁을 되돌아 본다
 =노동자의 잠재력과 투쟁력을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였다. 겨울철인데도 연말연시가 겹치는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민중의 역량을 이틀 뚫고 일어났는데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번 투쟁은 우리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투쟁이다.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이 촉발된 원인을 분석해 본다
 =현 정권이 무리수를 등에 따라 세 갈래의 민심이반이 일어났다. 우선 자본법이라 할 만큼 노동법을 개악함으로써 노동자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왔고, 안기부법의 개정은 양심적 지식인들의 광범한 반발을 초래했다. 또한 날치기라는 질차상의 폭거는 일반 국민들마저 격분하게 했다.
 -이제 대화국면으로 넘어간 것인가
 =절대 대화국면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다. 투쟁의 완급을 조절하는 국면으로 보아야 한다.
 -성공적 평가를 받는 총파업투쟁의 이면에 오류와 한계도 드러났을 텐데
 =현 단계에서 오류나 한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네 가지 과제를 짚어 보아야 한다. 첫째, 민주노총이 한국

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실질화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총파업투쟁을 범국민적 저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범국민대책위의 몫이다. 셋째, 야당과의 연대투쟁이다. 기회주의적 야당이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들이 자신들의 성과물만을 챙겨가지 못하게끔 견인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연대투쟁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정부가 국제노동단체 대표에게 추방위협 운운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해외토박이였다. 파업의 강제진압 등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국제적 불매운동이나 하역거부, 경제봉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범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
 =종교계·학계 등 각 부문별로 그리고 전국의 60개 지역에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실제로 항의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범국민적 저항의 목표는 날치기 악법의 완전무효화와 노동법 재개정이다. 이에 대해선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정리해고나 복수노조 문제 등으로 쟁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투쟁의 쟁점은 개악의 무효화다. 개별 조항을 쟁점화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무효화 이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선 교원·공무원 노조, 복수노조 등 3급의 철폐가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 가운데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의 확보는 복수노조의 인정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정혜숙 전교조위원장을 국제연대단의 대표로 파견한 것은 전교조 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변형근로 조항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체근로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삭제

조항 등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자본편들기로서 노조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다.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금지시킬 사항이 아니며 노사자치에 맡길 문제이다. 이처럼 개정 노동법은 한마디로 자본법이
 -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떠한가
 =사태를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축소화한다는 인상을 준다. 사회각계의 목소리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살·축소하고 있다. 영수회담 이후에는 총파업 기사를 대폭 줄임으로써 상황이 끝났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를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양 노총의 통일된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양 노총이 함께 전국 10여 곳에서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날치기 법안의 전면 무효화와 3월 1일 이전까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정리 해고제의 전면 백지화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계의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오늘 낮 2시 종묘공원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폭력 비난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정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로 구속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총호(충청총련 의장) 씨의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반면 변호인측은 “정부가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거부한 채 강경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격성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학생들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세대가 입은 물질적 피해와 김종휘 상경의 죽음에는 오히려 시위진압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

는데 모든 비난을 학생들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책임있다”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김종휘 상경의 사망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연세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해 나갔다.
 김병수(대전총련 의장) 피고인은 “김 상경의 죽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다양한 통일논의를 제한하고 이례적인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책임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피고인은 “우리가 지지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통일이었다”며 “법정에 나와 계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 아들을 믿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쳐 좌중을 숙연케 했다.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우리는 다음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의 행위와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이다운 열정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갈망에서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과연 친북적,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점이 단순히 몇 가지 주장에서 유사하다는 표면적인 비교를 넘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주장은 그 어떤 주장과 유사하다는 식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 차가 존재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주장이 충분히 수고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경정할 가치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경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원의 사실 및 가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한 시위를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최파이프와 화염병, 돌 등을 동원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창구단일화 논리로 민간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통일논의를 독점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통일에 관한 견해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통일대추전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경찰의 집회금지로 불법화되는 답답한 상황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25일 오후 1시 종묘공원 집결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3차 시민대회

북한카드 어김없이 등장 안기부 정치공작 의혹 전국연합, 개악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4일 탈북사건등 안기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지적하며, 날치기된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국내정치상황이 어려워 때면 항상 등장했던 '북한카드'가 또다시 등장하고 여기에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식상할 대로 식상한 대북카드 활용을 이제그만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기부법 상 직권남용죄가 있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은 안기부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안기부가 치외법권 지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면 날치기된 안기부법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폐기물 매립 반대 천주교인권위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 매립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돈을 주고 수출하겠다는 대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수입은 북한인민의 생명, 나아가 통일된 조국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핵폐기물 수입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수입은 북한인민의 생명, 나아가 통일된 조국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핵폐기물 수입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에서 심판하자" 여연, 정기총회 결의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등, 여연)은 23일 소속 29개 여성단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갖고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날치기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연은 결의문에서 "여성유권자 주체화운동으로 신한국당을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의 개악,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안기부법 개악은 반국민적 폭거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정보공작정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날치기 통과된 두 법의 전면무효화와 민주노동당 구속 및 고소·고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대전민가협

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홍성순, 대전

민가협)는 민주노동당 파업관련 구속자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구속자 및 4백16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인권간행물○

- **고난함께 제48/49 합본호-고난모임(393-4662)**
· 주요내용: '새해전망'-통일·남북합의서 실천운동을 제안하며/ 환경·고난받는 환경, 함께 나누는 삶/ '오늘의 인권'-해의인권운동(장기수 북송추진운동)/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인권교실'-인권의 세대론/ 좌담회· '인권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등 58쪽 값 1천2백원
- **자료집-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777-4014)**
· 주요내용: 참가단체 명단/법대위 제안서 및 조직체계· 사업계획/지역·부문상황/긴급성명 등 자료모음 등 60여쪽
- **자료집-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시국대토론회-전국서명고수모임(777-4014)**
· 주요내용: '개혁' 아닌 '반개혁'의 노동법(이광택)/경제위기의 극복방안-성장전략개혁의 관점에서(류장수)/총파업투쟁과 민주노동운동의 과제(임영일) 등 59쪽
- **전국연합 통신(통신 114호)-전국연합(921-4090)**
· 주요내용: 기고-통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검토(평화협정·주한미군·통일방안·국가보안법 등 4대과제 중심)/6월 민주항쟁,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민주민주운동동향-안기부 피해자 김형찬 사건은 또 다시 묻히는가?)/승리하고 있는 민주노동 총파업 투쟁/총파업 정국, 묘수 찾는 정부와 재계/바르샤바 회담관련 구속자 선고결과/시사해설-북한신년사 분석; 97년의 '최후의 돌격전/커브스토리-날치기 정국과 97정세' 등 75쪽. 값 2천5백원
- **함께걸음 1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7284)**
· 주요내용: 특집-장애우주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탐방-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일본 장애우복지공장/ 정책-특수교육 발전방안에 거는 기대/연중기획 '21세기 장애우복지의 과제, 탈시설화①/장애우의 세상형편-사회복지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이다 등 65쪽 3천원
- **참여연대 회원통신 97년 1월호-참여연대(796-83764)**
· 주요내용: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지난달의 참여연대 활동보고/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활동 소개 등 19쪽
- **교회와 인권 제15호-천주교인권위(777-0643)**
· 주요내용: 강론 '윤공회 대주교 시국기도회 강론'(요지)/ 특집 '안기부법'-개혁 땀개친 김영삼 정권/비판세력 탄압하는 안기부법 등 8쪽
- **빛두레 제287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3672-0251)**
· 주요내용: 니 청와대에 묵고 있나?/홍진 것은 되돌려라 등 4쪽
- **계간 「나눔터」 제20호-한국성폭력상담소(529-4271)**
· 주요내용: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열린터 내 당사 실태와 대책/가해자 연구2-성폭력과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몸이야기-노인의 성/특집-누가 그들에게 '강간할 권리'를 주었는가?/성문화읽기-'내일로 흐르는 강'이 말하는 가족 등 16쪽 1년 구독료 5천원.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폐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동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법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 김영삼정권 퇴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제

안산 만일공단의 덕부진흥에서 조합원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 계획과 노조와해 공작을 담은 대외비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덕부진흥 노조(위원장 이성권)는 안산지역내 민주노동당 산하 핵심사업장으로 지난해부터 천안공장 이전문제를 놓고 회사측과의 긴장이 계속되던 중이었으며, 최근 날치기 항의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은 이성권 위원장 등 6명을 해고 및 고소·고발하고 26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3단계 공작계획 회사측의 공작계획이 드러난 대외비문건은 지난해 10월 22일 작성된 「조직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조합원의 1/3인 1백25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문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을 3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포섭 및 설득작업을 계획했으며, 핵심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사전구속영장 발부, 용역인원 투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노동부 및 검찰서 등 관공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합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대기실 운영 문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조합원을 포섭·설득하기 위해 직방장 및 키맨(KEY MAN)이라 불리는 핵심요원 1백1명을 사전포섭하고, 이어 조합원 2백22명을 포섭가능인원으로 설정해 작업을 벌인뒤, 강성 조합원과 집행간부를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문서는 대상 조합원 명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작업을 위해 부장의 3명이 상시대기하는 비상대기실을 운영

한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또 노동부와 함께 갱의신고반려 및 고소·고발 대응, 각종 법률자문을 협의하며, 경찰 및 검정원은 불법파업시 경찰동원, 고소·고발 즉각대응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장이 직접 경찰서장 및 관공서장과 사전회합을 가져 전체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국후고꾸와 같은 양상 노조측은 "한국후고꾸에서의 진행상황과 똑같은 양상으로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탄압 양상이 정리해고를 위한 사전계획과 음모가 치밀히 진행되면서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비문서가 유출된 이후 회사측은 즉각 '알리는 글'을 통해 "해고자 전개롱이 총무부서의 문서를 훔쳐서 보관하고 있다"고 자칭이 해고되니까 최후의 발악으로 사원들을 현혹, 선동하고 있다"며 발표했다. 또한 "1백20명 가량의 여유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고용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작업을 설득하기 위해 인원을 구분했을 뿐이지 노조와해공작은 아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덕부진흥은 기아·대우자

동차 등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로서 매출액 1천여 억원에 종업원 5백여명인 증권기업체이다. 이곳 덕부진흥 노조는 87년 설립 이후 현재 조합원이 3백87명으로 한국후고꾸와 함께 안산지역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혀왔다.

전국 교수 농성 돌입 악법철폐, 개정 촉구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모임과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27일부터 사흘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은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폐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반민주적 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날치기주역 검찰고발 28일 유권자 75명

김택성(서울 민주시민연합의장), 심성구(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의장) 씨 등 유권자 75명은 오늘 오전 11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와 주역인 김수환 국회의장 및 오세훈 부의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업무방해혐의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와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범국민결의대회"

1월28일 오후2시
내곡동 안기부 앞(서울)

인천: 2시 동암역/수원: 2시 안기부 경기도지부 앞/대전: 2시 문화의 거리/전주: 2시 코아백화점/대구: 2시 안기부 대구지부앞/울산: 1시 주리원백화점/부산: 2시 안기부 부산지부 대표자 항의방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대위

집회 참가자 이유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 경찰관 20여 명을 강도 및 폭행죄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

김남곤 씨는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폭 1미터, 길이 80미터에 달하는 흰 천을 바닥에 설치해 '날치기 나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쓰기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천을 회수해 돌아가던 중 김한조 영등포서장 등 20여 명의 경찰로부터 강제로 천을 뺏기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손과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은 천을 회수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한다. 차후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은 "신고된 시위용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전국연합 인권위 고상만 씨는 "폭력시위물도 아닌데 신고 운운하며 물품을 뺏은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그 이상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료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주요 공판 안내

- 1월28일(화)
 - 최익환(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오전 10시 선고
 - 박소연·박형로·오동욱·오미정·조선이(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선고
 - 김영(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수영(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문치용(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 유덕상(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이민채(특수공무집행방해상등)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월29일(수)
 -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 김미정(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성두현의3(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유현수(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김석기의5(업무상과실치사등) 오후4시, 합의1부, 418호, 속행
 - 1월30일(목)
 - 곽정환의7(현주전조물방화등) 오전10시, 합의30부, 318호, 선고
 - 양경숙(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김태웅의 2·이명박의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1월31일(금)
 - 이후언(특공치상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박병언·이주연(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전민아·송민호(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강성모의 2명(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주간/인/권/호/름

(97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월)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헌 부장판사) 37년만에 4·19 시위부장자 박해준(62)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 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로 주한미군 윌리엄 야크 에스 일병 불구속기소 예정/<산케이신문> 보도, 일본 변호사 및 학부모들 군대위안부 강제연행을 반일적으로 기술해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교과서 피년 출판사와 국가를 청구소송 제기키로

<21일>(화) 민주노총등, 노동법·안기부법 철폐와 재개정 촉구/안양 중앙병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시한부파업별인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중용하고,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지급해 반발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용접 노동자 14명 망간중독 사실 밝혀/산재노동자 및 보건의료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 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측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항의

<22일>(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 부서중 93년 개혁조치에 따라 축소·폐지되었던 일부 조직이 되살아났다고 밝혀/민주노총, 주요파업에 전국노조 14만명 참여/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국대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센터' 개소/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구속기소된 한석 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중 학생회 활동, 정치집회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면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2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 보고/북한 두 가족 8명의 망명이 안기부작품이라는 의혹제기/양대노총, 두 법 전면 무효화와 3월1일 노동법 시행전 재개정을 제대로 하는 공동입장 발표/한국 기독교장로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 명 두 법 무효화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열어/일 총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속 강행키로

<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서울지검 양인2부, 한총련 연세대 시위진압중 사망한 의경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창학 씨등 10명에게 징역 10-4년 구형

<25일>(토) 한일 정상회담서 대만해피기물 공동대응 합의
<26일>(일) 양대노총, 날치기무효화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전면무효화!
노동법 재개정!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 검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쌍용자동차노조등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범식, 자동차연맹) 산하 6개 자동차노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자동차연맹은 2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을 비판하며,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저지를 위해 노동법등의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투쟁과는 별도로 쌍용자동차 인수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자동차연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김영삼식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다시 고용불안 자동차연맹은 "94년 삼성이 승용차 사업에 진출할 당시, 전문연구기관등에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이 파장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을 때 이를 무시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정반대의 논리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정부측이 "자동차업계가 과잉설비되어 있다"며 기업간 합병·인수문제에 장애가 생길 경우의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가능성등을 둘러싼 것은 사실상 이번

인수문제에 정부가 배후조종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그에 따른 세제, 금융지원 등 특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자동차연맹측은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연맹은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 역시 94년 당시 자체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각서를 통해 약속한 사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난했다.

노조탄압, 연쇄해고 우려 이번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고용불안,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연맹측의 주장이다.

또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완성차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가져와 자동차와 연관산업에까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갑득(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해 엄청난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이 구조조정을 들고 나올 것인데 이는 다른 자동차사에도 여파를 가져와 대량해고는 예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무노조정책을 유지해온 삼성이 쌍용뿐 아니라 해당 부품회사의 노조를 없애기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28일 서울·대구·수원 등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는 오후 2시를 기해 안기부 청사 및 지부 앞에서 시위와 항의방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개정 안기부법의 전면무효화와 김형찬(27·경희대 수원캠퍼) 씨를 불법연행·고문수사한 수사관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내곡동 안기부 청사앞에서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소속 서울지역 회원 및 대학생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동안 집회가 진행됐다.

연사로 나온 이기욱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와 김수환 추기경,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에게 잇따라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압력을 가했다"며 "정부가 안기부법을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도 구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선 안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가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자동차연맹측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쌍용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용문제 야기등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부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안기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최고의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찬 대책위」 소속 신건수 씨는 "고소·고발을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있고, 고문수사관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안기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는 수십 명의 사복경찰과 5-6백 명 이상의 전투경찰 및 백골단이 동원되는 등 이날 관계기관들은 집회에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전경들은 안기부 진입로를 철저히 봉쇄한 것은 물론, 집회참석자들이 차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열의 전방과 측면을 모두 포위봉쇄하는 등 시종 위압적인 자세로 나왔다. 또한 한풀이곳 공원이 경찰의 제지로 취소됐으며, 참가대표의 안기부측과의 면담 요청도 제지당했다.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28일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야정치가 낄치기 법의 전면백지화와 3월 1일 이전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2월 18일로 예정된 '4단계 전면 총파업'을 앞당기는 등 사생결단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권영길 위원장은 “영수회 담이후 노동법 개정등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터진 한보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실종될 우려마저 있다”며 지금의 사태는 총파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 전국순회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제까지의 3단계 투쟁보다 훨씬 강도높은 4단계 전면 총파업에 역량을 쏟기 위해 수요파업을 잠시 유보하고 다양한 총력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하 조직별로 총파업 결의대회 등 4단계 총파업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순회를 통해 직접 4단계 전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탄압사업장 집중투쟁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이유로 '무노동 무임금' '징계위 회부' '폭행'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단위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9일 탄압사업장 노조대표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총, 노동부 항의방문 및 55개 탄압사업장에 대한 민주노총 중앙차원의 항의서한 보내기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연맹·지역·그룹별로 악랄한 탄압사업장을 1곳씩 선정해 항의집회, 항의전화·팩스보내기등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권력·재벌의 부정부리 척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며, 한보사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성역없는 수사, 관련자 전원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한보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2월 1일 '비리재벌·부패정권 규탄과 낄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범국민결의대회'로 갖기로 결의했다.

“대통령 아저씨, 낄치기였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겨울문화 한마당-

2월2일(일) 오후1시-4시 종묘공원

<출연진>·사회·박철민/최광기

·노래:꽃다지/강산애/패니/안치환/한영애/권진원/류금신/노찾사/윤도현밴드/천지인/메이데이/정태춘 등
·소리:김명곤/임진택/오정해 등
·그밖에 영상/풍물/결계그림 등

주최: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대위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킨 김영삼 대통령을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천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및 법적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기금의 강행지급과 1월 24일 가지야마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공창과 다름없다”는 망언 등으로 틈만 나면 피해자들을 상처입히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만한 일본측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언지 못한 채 한일 정상회담을 강행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반발을 사 왔다.

시민연대와 정대협은 “국민기금을 강행지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기금지급 강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굴욕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래지향' 운운한 김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결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법적인 배상과 진심어린 사죄를 선행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과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한 제소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독점재벌구조 개혁하라

전국교수서명모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서명교수 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보사건에 대한 의혹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교수서명모임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독점재벌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경유착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관련 법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즉발적 독점재벌구조를 개혁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월말입니다!
구독료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총파업비디오> 판매

노동자뉴스제작단

현 노동계 총파업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1호가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해 제작·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내로 2호가 제작완료될 예정이다. 가격은 1만5천원, 구입문의는 민노총 교육선전국(3673-0685), 노동자뉴스제작단(888-5123, 우편발송 가능)

낄치기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일시:1월 30일, 오후 2시
장소:서울지방법원사회관 대강당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민주노총이 2월 18일 4단계 전면 총파업 총력을 위해 수요파업을 유보한 것과는 별도로 29일 대전지역에서는 한라공조등 지역내 노조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항의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탄압은 대전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전업종,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영수회담으로 낄치기법안에 대한 국회상정 및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방침을 밝혔지만 이와 달리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총파업 참가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총과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파업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파업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연차, 월차 수당까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9일 현재 총파업 기간중 57개 사업장에서 4백84명의 노조간부들이 고소·고발되었다. 또 덕부진흥 6명과 경희의료원 1명등 7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7개 사업장에서 88명의 노동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해고는 늘어날 조짐이다. 이밖에도 합법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저지로 35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고,

치료비 배상이나 책임자처벌의 조치가 없는 것은 물론, 강제연행된 3백여 명의 노동자 중 50여 명이 불구속입건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제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단위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고 가중될 경우 4단계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사태악화를 막기위해 각계각층의 대책마련과 진상조사단 구성을 시급히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윤우현 씨는 “기업측은 낄치기 노동법을 기정사실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사업장마다 총파업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하여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

국민대책위”는 29일 오전 야3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및 안기부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TV 공개토론회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민주노총은 29일부터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룹협의 회별로 탄압사업장을 선정해 대응태세로 들어갔다. 지역에 따라 부문별 파업, 해당기업 앞 항의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차로 선정한 악덕탄압 사업장은 한라공조, 한일전장, 인하의료원, 안양중앙병원, 경희의료원, 한국후코꾸, 덕부진흥, 효성중공업, 사몽화장품, 삼풍직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 투쟁”

▲한라공조: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라공조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조직부장 김영경 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협력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회사측 관리자 50여 명이 노조사무실 집기와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행사. 이어 11시 50분경 96년 11월 19일자로 부당해고된 조직국장 김영경, 선전부장 조민제 씨를 회사측 관리자들이 끌어내면서 발로 짓밟아 실신하는 사건 발생. 조 씨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오른쪽 뒷머리에 직경 10cm 이상의 큰 혹이 생겼고, 3cm 가량이 찢어 졌다.

▲인하의료원: 성남시에 소재하며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5백병상 규모의 병원. 지난해 12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당일 의료원측 김경자 위원장등 간부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 및 징계협박, 병원폐업설 유포. 2월 부서이동을 대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안양중앙병원: 1월 9일 총파업 돌입. 10일 병원측 김경진 위원장등 간부 5인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 1월 20일 기획실장, 위원장에게 “미친년”이라고 폭언. 1월 28일 위원장등 간부·조합원 21명 징계위에 회부. 병원측의 조합탈퇴 압력으로 조합원 60명 강제탈퇴한 상황이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급여에서 5만원씩 추가지급하는 한편 파업 참가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중간관리자 및 남성직원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기사사에 있는 조합원중 기사사 탈퇴 압력받음.

▲덕부진흥: 1월 6일 노조위원장등 간부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 26억6천만원 손해청구. 1월 13일자로 이성원 노조위원장등 모두 6명 해고. 회사측의 1백25명 정리해고 추진 계획 문건 입수<1월28일자 하루소식 참조>.

▲효성중공업: 1월 3일 박총배 위원장등 10명 노조간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6일 창원지법에 10억원 손해청구. 25일 노조위원장등 10명에 대해 1월 31일자로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총 6일에 대해 무단결근처리하는 한편 기본급은 물론 주차, 월차, 연차수당 삭감

<발재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편집자주> 이 글은 28일 산업노동학회(회장 오세철)와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주최한 '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세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준비'를 위한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 취지에서 김 교수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김 교수의 견해는 관련된 다양한 견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덧붙인다.

날치기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말해,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중심축으로 하고,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보조축으로 하는 지배세력의 새로운 형태의 반동적 공세이다.

둘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반동적 공세(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공세의 일환이며, 현 시기 세계본주의체제의 보편적 현상이다(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자유화·민영화·유연화·개방화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매우 강도높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개악된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노동자대중 전체를 비롯하여 몰아넣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적 노조운동의 전면적인 무력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변혁적 진보세력들을 탄압하는 기체인 국가보안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기부법의 개악을 동시에 시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넷째,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87년 6월 범국민적 투쟁의 효과로서 이뤄진 그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최종적으로 종결을 고하고,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강력한 힘이 치솟아 오르지 않는 한 위로부터의 반동화를 저지하고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을 전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87년 6월투쟁과 7·8월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이다. 6월투쟁은 보수야당이 헤게모니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결여한 투쟁이었던 반면, 7·8월 노동자대투쟁은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한 자연발생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이번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중심적 주체가 되는 가운데, 노동과 정치를 재결합시키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또한 이 투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저항이었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 투쟁을 통해 한국의 노

동자계급이 지배세력의 공세를 저지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세계 노동운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고 세계사의 흐름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기념비적 위업이 될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악법철폐' '신한국당 해체' '김영삼정권 퇴진'을 자신이 속한 기업과 업종 및 지역을 넘어서는 단일의 계급적 요구로서 제출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한국노동운동의 전국적 구심체로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이 우리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회적 힘으로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청년학생이 주도하던 시대부터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시대

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동적 공세에 대한 저항의 전형을 창출하면서 전세계 노동운동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맞부딪히는 시대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이는 대선에서 개혁부르주아적인 여당인사가 승리하든 또는 야당이 승리하든간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대립구도가 될 것이다.

이러나 유연화·탈규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와 '시장관계예찬론' 및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가 반복·반공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운동에 있어 이러한 제반 이데올로기를 얼마만큼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떠돌을 것이다.

● 행사와 동정 ●

- '자치관악을 위한 주민모임' 사업설명회
 - 일시: 1월 31일(금) 오후 7시-9시
 - 장소: 성민종합사회복지관
 - 주최: 관악주민연대(830-8515), 관악청년회(876-8300)
 - 주요내용: '자치관악' 활동방향/주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관악주민신문사 설립방향 등
-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 일시: 2월 4일(화) 오후 3시-6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지정토론자: 장호순(학계)/박종용(정계)/박상중(종교계)/손석춘(언론계)/유석원(학생)/김양희(여성계)/동출(시민)
- 제8회 기독교는단
 - 주제: "북한의 실상과 세계교회의 나눔운동" (박경서)
 - 일시: 2월 5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성가수녀원 강의실(735-7832)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12-3317)
- 부고
 - 김경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김영옥 선생의 부인) 씨가 28일 운명했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
 - 연락처: 서울대병원 영안실(765-3099)/장지: 벽계 용미리

"대통령 아저씨, 날치기였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일시: 2월 2일, 오후 1시
 장소: 종묘공원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영)는 "개정 노동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민단체 대표·언론인·교수로 구성된 재판부의 이날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개정 법률이 국회법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배되는 입법절차는 어떤 명분으로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입법절차는 헌법소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개정 법률 등의 절차는 당연히 당재판부의 심사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권을 갖는 것은 결코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권분립의 원칙이 요구하는 견제 기능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위협

날치기통과의 절차적 위헌성 못지않게, 개정 법률들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재판의 주요 관심사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개정 법률이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으로 대신했다. 안기부법과 관련해 청구인측은 "위헌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및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

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의가 지배하는 안기부 수사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법률들이 위헌인 이상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개정법률들을 의결한 여당과 논의의 성숙에 실패한 정부가 새롭게 논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민주노총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종순 목사) 소속 목회자들도 날치기 약법의 원천무효화

와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태규 목사)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총회 산하 1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철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예장목회자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안기

부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종순 목사) 소속 목회자들도 날치기 약법의 원천무효화와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목회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왔던 예장 총회의 이번 시국선언은 시간을 끌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정치권의 담합으로 현 정국을 돌파하려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독료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도 납부가능합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1월분 총목차(797-815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797	1/7	1	종로·명동서 2만여 명 개약반대 시위, 민주노총 23만명 파업/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2·3	96년 12월분 월총목차
798	1/8	1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수저지,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사회·시민단체, 대통령회전 '인식부족·무대안·무책임'이라며 일제히 규탄
		2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주간인권호름(96년 12월23일-97년 1월 7일)
799	1/9	1	수원교도소 양심수 치우개선 단식농성/경찰 대낮 8차선 점거, 도심지 교통마비/국제인권단체 성명, "경제발전 미명하에 노동자 희생 안돼"/온라인 토론회 "노동법, 안기부법 기습통과와 총파업
		2	김대통령에 항의엽서 보내기, 3일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타는 불에 기름붓기"
800	1/10	1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입국/총파업지지' 온라인이 뜨겁다, 1백여 동호회 검은리본달기, 총파업 지지서명 2천5백여명
		2	경찰폭력진압으로 부상속출, 노동자·학생 도심 가두시위/민변·참여연대, 민노총 지도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총파업투쟁일지
801	1/11	1	현대자동차 노동자 정재성 씨 분신, 날치기 원천무효 주장/전국 8백여 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노동·민주진영 총집결/농민운동가 최중진 씨 폐암으로 운명/총파업 투쟁일지
		2	경찰,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인터뷰>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3	세계의 인권⑨ 폭력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802	1/14	1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지 않아/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분신노동자 격려방문/총파업투쟁일지
		2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박노현 교수/주간인권호름(97년 1월6일-1월12일)
803	1/15	1	'불고지' 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인터뷰> 이민섭 김형찬대책위 상황실 차장,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2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현 파업은 헌법질서 수호 위한 저항권의 행사"/총파업투쟁일지
804	1/16	1	양대노총 72만 노동부 10만 무려 7배차, 노동부 총파업 집계 왜 그리 작은가/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애청 이원영 씨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2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도덕불감증 정부 비난/전국 변호사 554명, "날치기처리 원천무효"/"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총파업 투쟁일지
805	1/17	1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창원지법, 날치기 통과 위헌제정/폭행현장 목격한 외신기자를 찾습니다
		2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 65.6%/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오보에 항의/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통신서명 5천명 돌파/총파업투쟁일지
806	1/18	1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주요 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윤석진, 홍성담 씨 선고재판 연기
		2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대립/인권간행물

<인권하루소식> 97년 1월분 총목차(797-815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807	1/21	1	"파업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민교협 시국대토론회/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수행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2	민주노총·법대위,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교수/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주간인권호름(97년 1월13일-1월19일)
808	1/22	1	겉으로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의 고소·고발 416명/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국제엠네스티·휴먼라이츠 워치, 안기부법·노동법 항의/민변, 북한 쌀 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809	1/23	1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원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제한"/정대협, 한일회담 개최 반대/민민운동가 김홍겸 씨 사망
		2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고상만 간사/투쟁일지
810	1/24	1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조항 생점화 불순한 의도"/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811	1/25	1	"폭력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정치사 사건 징역 10-4년 구형/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2	전국연합, 안기부 정치공작 의혹 지적/천주교인권위, 대만 핵폐기물 매립반대/여연 정기총회, "신한국당 대선심판" 결의/대전민가협,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촉구/인권간행물/총파업투쟁일지
812	1/28	1	안산 덕부진흥,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전국교수 농성 돌입, 악법철폐 및 재개정 촉구/유권자 75명, 날치기 주역 검찰고발
		2	집회참가자 이유없이 불몰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주간인권호름(97년 1월 20일-1월26일)
813	1/29	1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 저지 연대총파업 선언/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2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제벌 비리 척결 투쟁"/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전국교수서명모임, "독점재벌구조 개혁하라"
814	1/30	1	영수회담 이후 노조 각개격파, 법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2	<발제문 요약>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815	1/31	1	시민헌법재판,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위헌"/예장총회 날치기 무효화 시국선언
		2·3	97년 1월분 총목차(797호-815호)

인권하루소식

97년 2월

(제816호 - 제833호)

“대통령 아버지,
날치기였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일시:2월2일, 오후 1시
장소:종묘공원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날치기에 문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기부고문진상조사위 위원장) 앞으로 오는 5일까지 김형찬 군 안기부 고문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인권협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구성된 국민회의 진상조사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김형찬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의심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배자로 오인돼 불법체포 감금된 채 무차별 집단구타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

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구성

각계 각층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악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12월 24일 국민회의는 이상수, 천용택, 추미애 의원등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 막바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경기도 경찰청장실에서 경찰청장등 주요 관계자와 김 씨를 불법연행, 구타한 박 실장(당초 김 실장이라 밝혀진 인물)과 피고발인중 1명인 안기부 직원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안기부측은 김형찬 씨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수사 안했다”

안기부측은 10월경 김 씨의 후배 유신호 씨가 ‘구국의 소리’를 녹취·배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2월 3일부터 잠복근무를 하던중 김 씨가 큰 가방을 메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 수상하게 여겨 연행했다는 것이다. 연행당시 김 씨의 주장처럼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이재규(경인총련

의장 직무대행) 씨의 체포영장을 제시한 바가 없고, 미란다 원칙을 고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당6동 파출소로 연행하던 중 그의 가방에 있던 컴퓨터 디스켓 1부를 압수하고, 파출소에서 출력하자 구국의 소리 녹취록등 북한관련 자료가 20여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측의 상반대는 주장에 대해 김형찬 씨는 한마디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가 메고 있었다던 가방이나 디스켓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두 가지 거짓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는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밝혀 냈다. 안기부측은 김 씨가 갖고 있던 디스켓 내용을 출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신당6동 파출소 경찰관은 “연행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컴퓨터 워드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출력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안기부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은 “억억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구타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양측 주장이 다른 점에 많아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조사발표에 신중을 기했다. 그리고 이틀 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통과로 소용돌이 정국 속에 김형찬씨 사건 진상조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조사작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흐른 지금, 국민회의측은 표면적으로 중단상태이다.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이미 김형찬 씨와 인권협 등은 안기부장을 포함한 수사관 6명을 서울지검에 고소·고발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다.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속에서 김형찬 씨의 사건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일 것이다.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오재식, 시민연대)는 31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국민기금을 철회하고, 법적배상을 실시할 때까지 국내외 활동을 끝까지 벌일 것을 재차 다짐했다.

구독료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도 납부가능합니다

세계의 인권 <10> -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조약 비준 서둘러야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서 피땀을 흘렸다. 이제 오빠 주변엔 피부색이 다르고 말씨가 다른 일꾼들이 있다. 오빠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월급을 주지 않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 하고, ‘이일에는 제격이야’라며 힘든 일만 시키면서도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 하는 불법침입자라 손가락질 한다. 10만 명에 이르렀다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낯설지 않게 된 우리의 이야기이다.

콘텐츠플라시옹 이야기

95년 초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 콘텐츠플라시옹이 주인집 아들과 동료 가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다. 그녀의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그녀를 구제하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같은해 홍콩에서 일하던 또다른 필리핀 여성이 8층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홍콩이민국이 그녀를 불법취업자로 기소하려는 상황에 몰린 그녀의 선택은 죽음이었다. 이런 비극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주노동자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가 머무르는 세계의 지붕 곳곳에선 폭력과 혐오의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 이방인 노동자(alien worker) 손님노동자(gues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등 나라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에 대한 적대감은 경기후퇴와 실업 속에서 증폭되고 있고,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노동사무국(B.I.T)의 90년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50명 중 1명 이상 풀의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이들의 화살은 서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용 4개 국가와 북미를 향해 급

하게 달려가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인구의 7%, 벨기에의 9.8%, 스위스의 18%, 발칸 3국 인구의 5%가 이주민이다. 주요 석유생산국 노동자의 무려 63.2%가 자국민이 아니며, 카리브해 연안국 인구의 10%가 북미로 이동하였다.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 그 수는 파키스탄 28만, 인도 47만, 타이 25만, 방글라데시 19만, 스리랑카 6만이며, 필리핀이 125만 명으로 가장 많다.

어떤 조건에서나 기본권 존중되어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좋은 삶은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현상이 바람직하나 아니냐, 어느 정부가 좋아하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서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게끔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이주 노동자 현상은 인력 송출국이건 수용국이건, 둘다에 속하는 국가이건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 전반에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였다. 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이주노동자 권리 조약)”을 채택하였다. 10년간의 작업과 협상을 통해 나타난 93개항의 이 조약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근거가 빈약하였다.

이주노동자 권리 조약은 “본인이 국민이 아닌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2조)를 내리고 있으며, 조약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빛나고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나 모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정의를 보여준다. 또한 그들에 대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적 추방에서 보호될 권리(22조), 이주 노동자의 지위나 지위의 변화로 인해 형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종과세로부터 보호(48조), 소득과 저축을 가지고 귀국할 자격(47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이주 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존재만이 아닌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넷째, 등록된 합법 노동자이건 아니건간에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적절한 조건의 증진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조약의 과제로 삼고 있다.

여섯째, 결국 조약은 최소기준의 확립을 추구한다. 자국 영토 내에서 누구에게 거주조건과 노동허용조건이 주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권리로서 보호되지만, 국내보호기준이 미흡한 국가들은 국제적 최소기준에 근접하게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90년 조약체택, 현재 6개국 비준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여, 20개 이상 국가가 비준해야만 발효되는 이 조약을 받아들인 나라는 96년 현재, 칠레, 모로코, 필리핀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권리 조약에 대한 비준 노력을 비롯하여 송출국정부와 수용국정부,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맡겨진 공동 과제와 특수한 임무는 우리 앞에 줄을 서 있다. 이주노동자의 실상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배우자의 권리나 노동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보장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서 인정하는 것 등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이주노동자 자신을 위한 생산적인 노력이 의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과업관련
고소고발 징계회부자
중앙 상경투쟁
5일 낮 12시
광화문종합청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 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가 계속 침해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법은 국제조약에서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 인권위측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 범 적용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등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치적 살인 행위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살인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도 연세대생 노수석 씨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사실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감옥 모니터링 필요

주요 인권부문에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선 대체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보법 사건에서의 잇단 무죄판결과 영장기각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감옥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 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히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판단이다. 동시에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와 통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개정 ‘친경영적’

최근 국내 최대 이슈인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1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교사 결사권 삭제, 복수노조 유예, 제3자개입금지 유지 등 노동권의 강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고려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노동법이 친경영적인 노동법이라며, 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어려운 노동조건에 직면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와 높은 산재율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조건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한, ‘인권’ 대화 제안

한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정치적 수인, 반체제인사, 송환전 탈북자 등에 대한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형자에 대해 학대가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수형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유기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인권위원회가 92년 창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체제를 위한 정치선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적 민간단체들이 북한체제의 쌍방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 숫자는 최소 2백명에서 최대 4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안기부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히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잠안제우기

주요 공판 안내

- 4일(화) 고대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선고 김광수, 송호준, 이선기,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속행
- 5일(수) 허인회, 국보법, 합의7부, 423호, 오후 2시, 신건 서형준, 국보법, 4단독, 524호, 오후 4시, 속행 민영우, 국보법, 11단독, 526호, 오전 10시, 속행
- 6일(목) 서다윗, 김우현, 신성필, 한현수, 국보법, 합의23부, 319호, 오전 10시, 선고 설중호 외 10, 특공방치사, 합의23부, 319호, 오전 11시, 선고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지난 1월 29일 민주노총과 범대위, 야 3당이 노조탄압대책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뒤,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0일 국민회의는 유재건 부총재를 단장으로 방용석, 한영애(노동환경위) 유선호(내무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울산으로 파견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노동부사무소 등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국민회의는 △정부의 노동법 재논의 약속이후 노조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1백32명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철회되지 않았고 △이미 합의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축소지급했으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총파업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분신한 노동자 정계성(현대자동차) 씨의 경우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고 최루탄을 발사함으로써 분신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의 진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처가 깊어졌다는 노동자측 주장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민주노총 김태영 법규부장은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을 통해 관한 경찰서와 노동부 등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한보사태등으로 조사단 구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차 악덕사업장으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비롯해 계속해서 진상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국회 중 노동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대정부압력으로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편에서는 노조를 상대로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선정한 11개 악덕사업장중 한 곳인 안양중앙병원에서는 1월31일 김경진 노조위원장 등 6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노조간부 21명이 징계조치당했다.

부산경찰청장 파면요구 노동법집회 30명 부상

전국민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날치기악법 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노동자·시민 30여 명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경찰청장 및 80중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부산경찰청이 고의적으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영수회담이후에도 여전히 '등돌린 민심'을 백골단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월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하셨습니다?
지로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주간/인권/호/름

(97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은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보도, 냉전기중 미군 중앙정보국이 중남미등 우방국의 군부, 경찰들에게 고문 기술을 교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발견됐다고

<28일>

임경춘 삼성그룹 자동차부문 소그룹장,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설 부인/전국연합, 여의도 집회뒤 이유없이 물품 빼앗은 영동포경경찰서장등 20여명 강도 및 폭행죄로 고소/20개 환경·사회단체 '대만해폐기물 북한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결정/경남지방노동위원회, 울산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휴업기간 급여지불 예외승인 결정/서울시민연합회 회원 73명 두 법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시킨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등 서울지검에 고발/범대위, 전국 7개 지역에서 안기부법 무효화과 김형찬 씨 고문수사관 처벌요구 시위/민주노총, 4단계 전면총파업에 집중위해 수요파업 당분간 유보/서울지검 공안1부 국보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소설가 김하기 씨에게 징역 7년 구형/노동법 총파업관련 광주(주)대우캐리어 광주지법에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백90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9일>

최성원 목사와 호치민시 총영사관에 따르면, 안기부가 호치민시 한인회장 선거에 개입해 야당성향 목사 임후보에게 사퇴압력/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주지법에 노조 전주지부장 김형철 씨와 노조문화부장 서정원 씨 주택에 5억 원씩 가압류 신청/국민회의 천용택 의원과 MBC방송에 따르면 22일 서해 무인도에서 구조한 것으로 안기부가 발표했던 두 가족의 망명과정에 안기부가 깊이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전국 1천5백77명의 교사·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두 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범대위, 민주노총과 야3당 노동탄압진상조사단 구성합의

<30일>

6월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 개소/한총련 연세대 사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 5명 국가를 상대로 1 억원 손해배상/예장총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 명 시국기도회/전국화물운송노조연맹 소속 계수도(40·(주)동방 노조쟁의부장) 씨 업무방해 혐의로 해고/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원 4명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노총 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리철폐, 부패정권규탄 및 날치기 악법철폐를 위한 집회'에서 평화행진을 하던 노동자, 시민 백골단에 폭행당해 30여 명 부상

<2일>

일본군 위안부 강덕경(68) 할머니 폐암으로 사망/민주노총, 노동법 개악반대파업 벌인 대우중공업·자동차 등 인천 전지역 25개 사업장 1만여 명 노동자 파업기간 임금받지 못해/신갈철거민대책위 조직부장 민병일(40) 씨가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실랑이 벌이다 폭행당해 뇌사상태

고 강덕경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민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3일 밤 11시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배보다 큰 배꼽, 보호감호」는 흉악범의 소굴로만 알려졌던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실상은 우리사회의 '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자전거 두 대를 훔친 죄로 17년을 청송감호소에서 보내야 했던 김용철 씨, 9천원어치의 고철을 훔친 죄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영철 씨의 사례는 "사회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나"는 의문을 제기해 주었다.

삼청교육 합법화 수단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우 교수(경원대)는 "법제정의 동기는 삼청교육대 교육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 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70% 이상이 절도범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징역과 보호감호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 7년의 감호조

치를 통해 이들을 올바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 실상은 '이중처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출소자 이영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1년 6개월은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7년이란 세월은 억울합니다. 형기외에 왜 2중3중 처벌을 줍니까?"

또 배종대(고려대) 교수는 "보안처분은 간판만 바뀌

였지 형벌과 내용이 똑같다"며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보안처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송감호소, 격리역할뿐

특히 청송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가족들이 면회조차 오기 어렵다. 이곳의 감호자들은 "감호소에서 보내는 7년은 사회적응력을 더 떨어뜨리는 기간일 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파탄까지 가져온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지적에서 보듯이 청송감호소는 범죄자들을 격리수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4일 낮 11시30분 일본대사관 앞은 어느 때와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로 한 많은 생을 살아가, 그러나 올바른 역사를 일깨워 주고 간 강덕경(69) 할머니의 노체에 참석한 이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풍물패 한두레와 김경란 씨의 살풀이 춤판이 벌어진 노체 한복판은 카메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접근하기조차 힘들었고, 참석자들은 한걸음 뒤편으로 물러선 채 묵묵히 할머니의 가시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한 귀퉁이에 서있는 이효재(장래위원회 공동위원장) 씨에게서 고인의 이야기를 들 어본다. 지난 7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심이 되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해온 그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고인과의 각별한 사이이다. "위안부 할머니 모두가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덕경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를 시인하며,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는 못죽는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요. 지난해 1월 쓰러져 2-3개월 혼수상태로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 1년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아가시기 1주일 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여권이 만기가 된다'며 일본으로 가기 위해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만큼 강덕경 할머니는 우리 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요. 그림을 통해 한을 풀어내기도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남긴 그림은 두고두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다시는 그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젊은 세대에 가르침이 될 것이다"

매주 수요일이면 아픈 몸을 이끌고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영정으로 다시 선 고인의 모습이 보였다. 슬픈 눈빛을 한 얼굴에 타들어가는 담배를 한 손에 든 영정 속의 강덕경 할머니는 굳게 닫힌 일본대사관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12시 30분 노체를 마친 2백여 명의 추모행렬은 일본대사관을 중심으로 한바퀴 돌아 조계사를 거쳐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고인의 시신은 벽계 화장터에서 화장을 마친 뒤 고향인 경남 산청에 묻혔다.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2일 새벽 경기도 용인 신갈파출소에서 발생한 ‘민병일(40·노점상) 씨 뇌사사건’에 대한 경찰측 주장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설명하는 당시의 상황은 “민 씨가 새벽에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왔으며, 소속 의경이 민 씨를 밖으로 밀치자, 뒤로 넘어진 민 씨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뒤로 넘어진 민 씨가 어떻게 앞이마가 함몰되는 증상을 입었는가”하는 점인데, 민 씨가 1차 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은 경찰측 주장에 대한 의혹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앞이마에 상당한 충격”

민 씨를 1차 수술한 남수원병원의 X-레이 및 CT 촬영 기록과 담당 의사의 의하면, “민 씨의 정수리 좌측 부위의 두개골이 8-10cm 가량 함몰되었으며, 뇌막하혈종(두개골 내부에 피가 고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담당 의사는 “민 씨가 머리를 무언가에 맞은 것 같다”는 진술을 했으며, 특히 뇌막하혈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학적 통설로 미루어 단순히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철준 변호사는 “적어도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담당한 아주대 병원측은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4일 병원 담당 의사는 “수박을 떨어뜨렸을 때 윗부분이 깨질 수 있듯이, 사람이 뒤로 넘어져도 앞이마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앞이마가 둔기에 맞아서 골절됐을 가능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주변인들은 “민 씨가 2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담당 의사는 ‘머리를 맞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며 “이는 민 씨의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대병원측이 경찰측과 상호교감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새벽 민 씨 행적 의문

또 한가지 이번 사건의 초점은 당일 새벽 민 씨의 행적과 관련한 부분이다. 경찰은 민 씨가 새벽 4시에 파출소를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 6시경에 다시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 시간 동안 민 씨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미 민 씨가 두개골 부상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 씨가 파출소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둔기로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머리밖 출혈 시엔 72시간 가량 활동이 가능하지만, 머리 내부출혈(뇌막하혈종)이 생기는 충격을 입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이다.

물에 구타 흔적 보여

한편, 남수원병원 진료 과정에서 민 씨에게선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자국과 여러 상흔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

경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 일체의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상의 여러 의혹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다면, 경찰은 또 한번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87년의 변명을 되풀이한다는 의혹을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밤 현재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과 약물투여로 연명하고 있는 민병일 씨는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김혜원(정대협 사료관 준비위원장)

강덕경 할머니는 29년 2월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여 거의 외가에서 생활하였다. 할머니가 요시노 국민학교(현재 중앙중등학교)에 다니던 중 담임선생이 가정방문하여 정신대에 나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할머니(당시 15세, 고등과 1학년)는 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 1기생으로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옮긴 후 다시 도야마현 후지코시로 이동하였다. 배고픔과 고된 노동에 견디지 못한 할머니는 2년의 탈출을 시도한다. 두 번째 탈출을 시도하던 밤 트럭에 탄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야산으로 끌려가 순결을 빼앗긴다. 그 길로 할머니는 ‘하루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다미 한장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방에는 하루에 10명의 군인이 찾아왔으며, 주말이면 더욱 많은 군인을 상대해야 했고 그래서 토요일이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처량한 생활을 군가에 붙여 노랫말을 붙여 부르곤 하였다. “아아 산 넘어 산을 넘어/멀리 만리를 정신대로/상동명에 갇혀/내 몸은 찢겨졌다”

해방 후 조선사람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왔으나 그때는 임신한 몸이었다. 46년 1월 아기를 낳고 집으로 찾아갔으나 어머니에게 쫓겨난다. 그후 부산에서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고 일을 다녔는데 어느 날 아기가 폐렴에 걸려 죽고 그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그후 많은 일을 하며 살았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은 항상 아팠고 자궁내막염과 나팔관 이상 등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번 돈을 모두 써 버리고 만다.

92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신고한 뒤, 92년 말부터 국내외에서 증언 집회 등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쳤다. 94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시절의 아픔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그림들은 95년 제4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할머니는 95년초 폐암말기 선고를 받고 곧 돌아가실 것이라 모두들 예상했지만 1년동안의 투병생활을 훌륭히 해냈다. 이 기간에도 할머니는 수요시위에 참가했고 각 방송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후손들에게 끝까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쳤고 끝까지 일본 정부에게 책임자 처벌과 법적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강인함을 보였다.

고 강덕경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 씨는 가족들이 사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던 이성우 씨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자신의 출국금지기간이 재차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2월 1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놓은 상황이었으며, 앞으로는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이 씨가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5일 부산검찰청 담당 공무원은 “이 씨는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

집행정지의 신분으로 있는 한 출국길은 평생 막히게 되며, 사면이나 가석방 조치가 내려져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창익 전추교인권위 사무국장은 “당국의 조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70이 넘는 고령인데 병든 몸인 이 씨가 마땅히 가족과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43년 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에 정착하게 된 이 씨는 84년 사업차 한국에 입국했다가 간첩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감옥 안에서 지병인 비후성 심근비대증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95년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출감했지만, 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일본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이 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인으로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할 염려가 전혀 없고, 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도쿄 지방본부 단장 등이 이 씨의 도일치료를 호소하면서 이 씨를 적극 보호,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출국금지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죽이기’ 총력

기업측의 조직적 탄압이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고소·고발자 및 징계회부자 3백여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주들의 손해소송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등 기업측의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2월 5일 현재 1월분 임금 지급에 따라 무노동무임금 적용실태는 현재 현충원 소속 6개 사업장 조합원 3만8천8백 명의 임금·성과급 수당등 총 4백91억 원이 삭감되는 등 40여개 노조에서 5백33억4천여원을 동원한 폭력행사와 심지어 부친 상품화장품등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텃가슴을 만지고 복부를 건어차는 등 성추행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노동법·안기부법 전면무효화와 3월 1일 이전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4단계 전면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대우캐리어, 현대자동차 등 6개 사업장에서 노조간부 및 조합원 1백69명과 신원

기간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나라타 공항에서는 가족들이 하루종일 이 씨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고 하며, 현재 전신 관절에 근육통을 앓고 있어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증인 26명에 대해 총 36억1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간부 10명과 신원보증인 2인에 대해 총 10억원 상당의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등 기업측의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2월 5일 현재 1월분 임금이 지급됨에 따라 무노동무임금 적용실태는 현재 현충원 소속 6개 사업장 조합원 3만8천8백 명의 임금·성과급 수당등 총 4백91억 원이 삭감되는 등 40여개 노조에서 5백33억4천여만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의 임금과 상여금 지급이 구정 직전이나 10일 이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임금, 수당 삭감은 이보다 몇 배 더증가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망했다.

또 상품화장품, 현대중공업, 덕부진흥 등 10개 사업장에서 1백29명의 노동자가 징계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미 상품화장품 4명, 덕부진흥 6명 등 5개 사업장에서 13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인권하루소식 2월 7-8일지는 쉽니다.
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지료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개약된 노동법·안기부법의 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결의가 뜨겁다.

전교조(위원장 권한 대행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서울 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추진본부」(본부장 이영희,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11-12일 전조합원 총회를 통해 구체적 투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교조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집중해 89년 5월 전교조 결성당시 수준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최소한 89년 노동법 개정안 수준으로 보장할 것과 임시국회 기간에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진본부는 서울

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한 나라도 없다”고 밝히며, “여론조사결과 교원의 90.3%, 노동법 학자의 92.7%, 국민들의 73.3%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16개 시도지부 추진본부 대표 명단

△서울 김민곤 △부산 박영관(39·대명여고) △대구 이남규(44·서도초등교) △인천 원학운(47·신현여중) △광주 이기범(45·광주진흥중) △대전 이권춘(38·대전 동신고) △경기 이중현(42·남양주 장현초등교) △충북 양석진(41·음성 삼성중) △충남 김영희(48·서천 서면초등교) △경북 배용환(46·안동 와룡중) △경남 허경도(41·거창위천중) △전북 김윤수(45·고창고) △전남 정연국(44·목포기계공고) △울산 서민태(34·옥현초등교) (강원, 제주 미정)

의경치사사건 선고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때 김종희 이경의 사망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중호 씨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가 89년 동의대 사태 당시의 뒤를 따르게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 주목된다.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정부가 이미 OECD와 ILO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전교조는 “OECD 가입국중 교원의 노동기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자들 가운데는 지존과 일당과 택시 승객을 살해암매장한 은보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94년 15명, 95년 19명의 사형이 집

행되었고 지난해에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의 사형확정 연도는 90년 1명, 91년 7명, 92년 14명, 93년 6명, 94년 4명, 95년 12명, 96년 8명 등이다.

정정합니다.

5일자 2면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기사 가운데, “4일 병원 담당 의사는...뒤로 넘어져도 앞이마가 깨질 가능성” 부분에서 ‘앞이마’는 ‘두개골’이라는 표현을 잘못 전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인권간행물○

□ 햇살한줄-인권지기(062-529-7576)

·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날치기 노동법 개약내용과 문제점/파업에 관한 ‘결사자유위원회’ 원칙 등 116쪽

□ 자료집:정세전망과 노동운동-노기연(882-0636)

· 주요내용: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김성구)/21세기 작업장 체제와 노동(강수들)/향후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세(김세균)/노동운동의 발전방향(김상근) 등 74쪽

□ 자료집: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고인 진술서

· 주요내용: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와 위헌성(이승우)/12·26 총파업의 적법성과 개정노동법의 무효여부(이광택)/노동기본권에 비추어본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이광택)/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날치기 처리에 의한 법제정 문제(최장집) 등 77쪽

□ 우리통신 제1호-우리사상연구실(838-8359)

· 주요내용:사상혁신운동의 역사와 그 범주/노동법 정국 분석과 향후 정세전망/노동법 개정 투쟁 세력별 입장 정리 /97년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 정리 등 57쪽

□ 나눔의 집 제11호-나눔의 집(0347-64-0064)

· 주요내용:할머니 동정/나눔의 집 소식지 일본 상륙/한국일보 인터넷에 정신대 홈페이지 개설 등 8쪽

□ 노동과 건강 44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97 산재추방운동의 전망/태백지역 광산노동자의 실태/망간중독의 증상과 진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운동본부소식-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주요내용:미군에 의한 팽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포항에서 발생한 미군 폭행사건/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90년 이후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등 16쪽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지로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경찰 폭력에 의해
뇌사상태에 이른
민병일(경기도 신갈)
씨와 이종호(인천) 씨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 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조항 악의적으로 해석

전국연합 민생국의 김남곤, 권기혁 씨는 지난 1월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길이 80m 짜리 대형 플래카드를 경찰에 압수당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

했다며 김한조 영등포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을 강도 및 폭행죄로 남부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본지 1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압수를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몰품압수와 그 과정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당

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호 검사(305호)는 “한국노총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헌충련 등 사회단체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오히려 김 씨 등이 집시법을 위반했음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 씨 등이 집회에 참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해석인데, 이는 집시법에 대한 악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조항인 집시법 제4조는 주최측의 입장에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결사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는 “주최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주최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에도 참가 배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 실령 경찰과 주최측간에 특정인의 배제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상 집회 참가가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플래카드 제작도 불법?

또한 집회 신고와 시위방법을 규정한 집시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플래카드의 경우, 경찰측은 해당자들이 관련조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기욱 변호사는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폭력시위용품은 불법시위용품이 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의사표현 방법인 플래카드 제작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변호사

는 “시행령 2조 8항의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조항이 경찰의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경찰의 폭행부분에 대해 담당검사는 고소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맞아도 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변호사는 “미신고 물품이라도 강제로 폭행하여 빼앗는 행위는 명백한 강도행위”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에 이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도 조만간 관련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으며, 두 단체는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에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판 안내○

- 2월11일(화) 김영(김하기, 국보법 탈출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문자용(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2월12일(수) 박종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양정희의 6명(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오전10시, 4단독, 524호, 속행
- 2월13일(목) 이준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강병연(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강성모의 2(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서미연(국보법등) 오전10시, 3단독, 320호, 속행 신승우(국보법등) 오전10시, 5단독, 519호, 선고
- 2월14일(금) 이승구(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서울지법형사국

**<설명서> 진보정치연합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북한의 이종호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 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더구나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 민간단체에 의해 폭로되고 나서야 마치 새로운 사실을 접한 것처럼 대만과 북한을 비난하는 거짓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는 대로 한반도 북부 역시 우리 민족의 생활권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족 전체의 안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온 민족의 생명을 위협할 핵폐기물 이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해 왔다. 만약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그 책임은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 곤궁과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 넣고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라는 절박한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시대적 발상에 의한 대북 고립 정책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 정부는 자신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발발이 될 위해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받아들여야 할 처리로 북한을 내몰고 있음을, 그럼으로써 민족의 생활 터전을 외국의 쓰레기하치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3. 우리는 최근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이며 모순된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 산인가에 따라 그 위험 정도가 변하는 물건인가?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그동안 정부가 핵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속여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1997. 2. 5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합없고 백없는 약자들에게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소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주간/인/권/호/름
(97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3일>(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 뒤 법 개정을 위한 대역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죄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이경진(18) 씨 오전 0시30분께 숨지자 유족들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며 사인구명 요구/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 계획에 대한 항의방문단 '대만 상품 불매운동' 벌이기/원 대자동차측이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등 14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 미국 국방부측 미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10만 명 수준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 고려 시사/영국 북서부 셀라필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루 2-3차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4일>(화)

일본군 위안부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보사태·안기부법·노동법등 현시국과 관련 목회서신 산하교회에 보내기로 결정/광주시 국방부에 5·18 당시 작전명령과 상황일지등을 포함한 계엄군 자료 20종 제공 요청/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에만 남아있는 일선 교사들에 대한 출근부 비치, 날인제도 지침 변경안 검토로 폐지전망

<5일>(수)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등 전국 44개 시민단체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반대 해상시위/김종필 자민련 총재, 민노총 간부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고 국회개원을 지연하고 있는 신한국당 비난/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제치하에서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박장환(75) 씨등 46명 51년만에 후생연금발급수당 1인당 40-50엔(약 3백원) 돌려받게 됐으나 일본정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보상 요구하며 수령거부/전교조, 중앙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추진본부' 결성 밝혀/민주노총 노조간부 3백여명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해청구, 고소·고발에 항의집회 가져/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상습적인 폭행을 뜻이겨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44) 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6일>(목)

재정원과 통계청 발표, 96년 남자경제활동참가율 76.1%로 전년에 비해 0.4% 하락/송파구 올해안에 장애인전용복지관 건립키로/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의경치사사건으로 구속된 설총호씨의 10명 재판결과 전원에게 유죄인정 5년-2년6월 선고

<8일>(토)

독일 2차대전 뒤 최악의 실업사태 대처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관계 업무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단행키로

<9일>(일)

서울시 지하철공사 울지로입구역·서울역 등 4개역에 공기염 자동측정장치 설치키로

경찰 폭력에 의해
뇌사상태에 이른
민병일(경기도 신갈)
씨와 이종호(인천) 씨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개인적 불일로 파출소를 찾아가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와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민병일(40·노점상) 씨와 이종호(38·노점상) 씨가 각각 경찰과의 시비 또는 조사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은 우리 사회 경찰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요청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이종호 씨는 숨만 쉬고 있을 뿐 사실상 사망한 상태이다. 담당 의사는 "뇌혈관경색(혈관에 피가 안 통함)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평소 건강하던 이 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얼마후 의식을 잃었다"며 폭행과 뇌혈관경색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2일 새벽 이웃과의 시비 도중 파출소로 끌려갔으며, 두 손을 등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복부와 가슴을 발로 구타당한 뒤 쓰러졌다. 이 씨를 폭행한 안제화 순경은

"이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발로 한 번 찼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 지휘 검사는 뇌사원인과 관련해 '평소 약물중독에 따른 급작스런 혈관경색 가능성' 등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안 순경의 폭행이 뇌사의 직접원인이 되는지 밝혀져야겠지만, 안 순경의

직무상 가혹행위와 중상해 죄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지휘 검사는 뇌사원인과 관련해 '평소 약물중독에 따른 급작스런 혈관경색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민병일 씨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대 동연회장 위독, 분신사유는 '학원자주화·사회민주화'

지난 10일 새벽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한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경기3) 씨가 입원한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출입구와 복도는 갑작스런 선배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로 가득찼다. 11일 오후 3시, 전신 3-4도에 90% 화상을 입어 의사로부터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말과 더불어 이날 새벽부터는 의식마저 잃어버린 상황 탓인지 학생들의 분위기는 침울했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마저 들려왔다.

한 씨의 분신은 가정문제에 의한 비판자살이라 보도한 언론이나 경찰, 학교측의 이야기는 달랐다. 한 씨 어머니 또한 "집안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9일부터 한 씨와 함께 있었고 맨 처음 불길에 휩싸인 그를 발견한 총학생회 간부 홍 아무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실은 보다 명확해졌다.

사건 바로 전날인 9일, 설연휴를 마친 총학생회 간부들은 총학생회실에서 모임을 갖기로 약속했다. 밤 10시부터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밤 12시경 얼굴을 비친 한 씨는 1시간 가량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물론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새벽 1시경 자리를 비운 뒤 술자리가 파하는 새벽 3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홍 씨는 새벽 4시30분경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서 문밖으로 고개를 내미니 화기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복도 끝부분에 불이 붙어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몇 번이나 운동 열심히 해라, 나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요. 제가 담요를 갖다가 불을 끄고, 뒤이어 나온 한 학우가 물주전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 뒤 구급차를 불러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그는 말하기 힘들어했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생활해라'는 말을 했죠."

홍 씨는 비록 한상근 씨가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분신 이유를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현시국에 대한 고민과 신임 동아리연합회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학원자주화추진위 중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 담당자로서 고민등이다. 특히 학자부분은 학교측 관련자료 수집에서부터 마찰이 심했다고 한다.

또 10일 오후 5시 중환자실에서 한씨의 형과 이모 및 KBS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분신 이유가 뭐냐, 학내문제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상근이는 의협심이 강하고 애국심이 남다른 학우입니다. 일본의 독도망언이 있던 직후 일본대사관 점거투쟁에서 대사관 담을 넘다 잡혀 불구속이 되기도 했고, 김형찬대책위 농성단 활동으로 15일간 명동농성을 벌이는데 열심이었지요. 그런만큼 시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우리 모두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열심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요약> -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못해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민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출범이래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을 알리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급자들에게 대한 협박, 신체적 학대, 수면 박탈을 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휘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법안의 통과에 항의하여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부 출소 정치수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안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 정부가 혐의를 조작해 형을 받은 것으로 믿어지는 일부 수감자들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시위과정에서 학생 1명과 전경 1명이 사망했다. 시위에 참가했던 연세대생 노수석 씨는 경찰에게 쫓기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활동가들은 노 씨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심장마비가 경찰폭력에 의해 유발됐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씨의 시신을 부검한 의료당국은 노 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밝혔다. 또 8월 연세대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 1명은 학생들이 던진 돌을 머리에 맞은 뒤 사망했다.

고문,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정부는 과거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한 고려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마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학대, 모욕하여 고발된 공무원이 기소된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교도소의 조건은 엄격하다. 식사는 적절하나,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일부 수인들은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교도관들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료보호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수인들의 읽을거리나 TV의 시청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향상되었다. 인권단체의 대표들이 교도소장의 재량 하에 몇몇 수인들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수용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는 거의 없다.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 한국의 법은 종종 모호하고, 검찰이 폭넓은 법 해석의 자유를 갖는다. 국보법은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협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대부분을 북한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은 보통 중범죄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의 부정

획기적 결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측근들이 79년과 80년 당시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간첩 행위로 구속되었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기구들은 정치범의 숫자를 4백 명 이상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들의 규정은 종종 그 행위가 폭력을 수반했는지 또는 다른 형법을 위반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행위로 구속된 모든 수형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규정된 정치범의 수와 구급자의 수는 2백 명 이하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가족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과거 공안당국은 도청을 포함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다양한 감시를 벌였다. 반도청법과 안기부법 개정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단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불법 도청이 현존하며, 경찰이 불법적 도청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 기구가 없다고 주장한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

경찰 폭력에 의해 뇌사상태에 이른 민병일(경기도 신갈) 씨와 이종호(인천) 씨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샴용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1월 총파업 투쟁이후 회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로 인해 여러 사업장들이 '노조 지키기'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샴용화장품(대표이사 박재남)이 그중 하나인데, 샴용화장품은 노조가 1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벌이자, 곧바로 파업기간 임금 미지급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대량징계와 집행부 4명에 대한 해고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노조활동이 거의 무력화되었고, 위원장을 제외한 노조간부들은 회사를 근마져 저지당하고 있다.

'무노무임'으로 노조무력화

회사측은 이번 노조의 총파업을 '대정부투쟁을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무노무임금 원칙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다음날인 1월 16일 회사는 "업무복귀시 모든 사항을 불문에 붙이겠지만 미복귀 시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불법파업 및 태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75명의 조합원 가운데 주부사원 30여 명이 이탈하면서 노조는 동의서 작성자와 비작성자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빛어지기도 했다.

'파업 불참' 동의서 강요 폭행·성추행 당해

특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강제로 작업장에서 내몰리는 과정에서 남자 관리직원들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해 사무장 최선혜 씨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이며, 노조는 관리직원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백연희(26) 노조 부위원장은 "총파업투쟁이 정부와 노동자 간의 대결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싸움에 사실상 정부를 앞세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충분히 각인하고 있지 못했다"며 "정부와의 싸움으로 회사만 손해를 입었으며, 따라서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는 회사측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굴욕감 속에 작업 복귀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 97년 정기대의원대회
 - 일시: 2월 13일(목) 오후 1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 '고향유정' - 시인 김남주를 기리는 고향그림전
 - 일시: 2월13일(목)부터 19일(금)까지
 - 장소: 광주시 북구 송원갤러리(송원백화점 8층)
- 시인 김남주 3주기 추모제
 - 일시: 2월16일(일) 오전 11시
 - 장소: 망월동 5·18묘역
-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회
 - 일시: 2월18일(화) 오후2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학술단체협의회 주도변경
 - 주소: 종로구 계동 140-44(우 110-270)
 - 전화: 747-0338/ 팩스: 741-6126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 715-9185

〈자료 요약〉 -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 '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한 반면, 계속해서 상당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의 부패방지운동으로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돈을 주는 일은 감소하였으나, 기자의 금품수수를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비판은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정부의 언론 보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국가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거나 이익 또는 호기심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소지 또는 출판한 동기를 규정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정부는 계속 정부지침 내에서 북한에 대한 언론보도를 증대하였다.

영화의 성적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공윤은 최근 몇 년간 보다 자유화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b.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8월 한총련이 이끄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자들은 판문점에서 집회를 열려다 불허되자, 연세대 건물들을 점거했다. 대학 교정안의 시위에는 개입하지 않는 전례를 벗어나, 정부는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교내에 투입했다. 대학에서

의 대치는 1주일 이상 지속되었고, 경찰 1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명의 학생과 경찰이 부상당했다. 몇몇 인권단체는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잉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시위학생들의 전술이 폭력적이고 도발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외하곤 결사는 자유롭게 행사된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존중하고 있다.

d. 국내 이주 및 외국여행, 이민과 귀환의 자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내를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전 양심수의 이주는 제한할 수 있다. 외국여행은 대체로 제한을 받지 않지만 북한 여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북한 여행자들은 남한으로 귀국과 함께 구속된다.

과거 정부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한국인들의 귀국을 금지하였으며, 아직도 그들은 귀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예 윤이상 씨).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난민을 지원하는 여타의 인권조직과 협력한다. 정부 지침은 망명 요청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3부 (중략)

4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민간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몇몇 민간단체가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운영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들중 대표되는 주요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내외에 자신들의 견해를 알려지도록 한다. 정부와 여당 공직자들은 대

체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기꺼이 만난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헌법과 평등·기회균등 법규들은 종족,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태도가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며, 소수민족은 법적·사회적 차별을 당한다.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천1백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 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등을 신고·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91년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이며,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혼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혼이 어려워 일부 여성들은 학대받는 처지에 남는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해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시설을 증설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유교 전통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는 제한적,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중역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은 거의 없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

용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한상근(27·경기3)씨가 13일 정오 경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지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지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로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노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

도 움직여들었던 투쟁 동력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농민·여성·교수·변호사·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와 전국동시다발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과 토론회, 세미나 등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중 '노동법 제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와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가 이어진다.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

부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고, 27일경엔 안기부법 관련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단위노조별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15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제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통해 비상대기에 들어가면서, 22일까지 준법투쟁 및 집회투쟁을 거친 뒤, 24일에서 28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야당이 불철저한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야당 농성도 돌입하기로 했다.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부터 봄방학 전까지 전국의 각 학교별로 날치기 통과와 노동법 등에 관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총파업 사태의 원인과 내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올바르게 그리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공동수업에 대해 정부는 즉각 교사징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공동수업 첫날을 보낸 일선 학교의 정진화 교사를 만나보았다<편집자주>.

-공동수업이란 무엇인가

=교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일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총파업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4·19, 5·18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에 관해서도 공동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첫 공동수업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미 개학 후부터 일주일 정도 실질적인 공동수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 등을 수업시간에 10-20분 정도 할애해서 설명해 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선 학생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라는 점 등을 같이 이야기했다.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자신과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날치기와 노동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방학동안 신문스크랩 숙제를 해온 학생들이 가운데 많은 숫자가 총파업 관련 스크랩을 해왔다.

-교사의 강의만으로 공동수업이 진행되는가

=학생들은 일방적 강의를 싫어한다.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수업은 진행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3분뉴스 시간 등을 가지고 있다. 정규수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가워한다.

-일부 이념 교사들이 편향된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이라며 당국은 징계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교사가 '나만이 진리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독선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반대 의견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공동수업을 통해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르다. 왜 다르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공동수업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냉소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말리지는 않나

=교장·교감 선생님의 시찰이 있긴 하나, 별다른 간섭은 없다. 그분들도 날치기의 부당성을 알고 있지 않은가

-공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법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장래 자신들의 문제라는 점을 느끼고 권리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판 ③

미국무부 세계인권연례보고서 중 남·북한편을 요약정리해 4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주>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연맹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들의 가입으로 노동쟁의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간주되지 않는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 <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차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 조합원들을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했다. 정부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건수가 몇 년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보였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 <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

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영 기업 고용인들, 방위산업과 공·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해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민주노총과 같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연맹에 의한 제3차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한 노동연맹(원칙적으로 한국노총)과 그 가입자와 일부 독립적인 사무직 연맹이 가입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e. 노동수용 조건

정부는 88년 최저임금법을 시행했으며, 매년 재검토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7달러(1천4백원)로 올랐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인력부족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계속 남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10만명을 넘으며, 작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불법노동자들은 항상 국외추방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임금의 손해나 불만족스런 생활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매주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끝>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민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일 새벽 경기도 기흥읍 소재 신갈파출소와 인천 부평경찰서 산곡파출소에서 철거민 민병일 씨와 노점상 이종호 씨가 경찰관들의 무단적 폭력행위로 인해 뇌사와 혼수상태에 빠진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며 경찰물리력에 의존하며 인권유린을 서슴치 않는 현정권의 폭력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관련 경찰관 몇 명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러한 사건은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온 사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전 이덕인, 신연숙 씨 등 노점상과 철거민이 경찰병력과 철거장패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살인행위에 대해서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온갖 은폐와 조작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으며, 진상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각계에 대한 탄압만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동안 재벌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여 국민기본권을 짓밟고 반사회적인 폭력을 사주하는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그동안 부패한 경제구조와 정책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도시민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자립대책과 제도·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비리재벌들과 결탁하여 상습적인 인권유린을 조장하며 동절기마저 도시민민들의 주거권과 생계수단을 짓밟는 작태를 반복적으로 벌여오지 않는가!

작년말 노동법·안기부법의 개악과 한보비리, 그리고 도시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살인폭력 등은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보수정권, 재벌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구조를 부패시키는 주범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더이상 국민기본권을 억압하며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당국과 일선 경찰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폭력행위를 결코 묵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현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투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전면적인 사회민주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패한 현정권과 재벌경제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7년 2월 12일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노점상 이종호 씨
용인대 한상근 씨
수원 김종경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인민이 굶어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황장엽 비서의 망명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의 굶주림’에 격분하는 듯한 조선일보 13일자 머릿기사의 제목이다. 조선일보가 13, 14일 이틀간 내보낸 북한 관련 기사는 총 16면 35쪽지. 그러나 도배질에 가까운 북한 관련기사의 홍수 속에서 ‘굶주린 인민’에 대한 존중이나 동포애적 연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굶주린 인민은 생존해야 할 인격체이자 동포가 아니라 ‘이념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듯한 인상이다.

12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는 85년 이디오피아의 대기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95·96년에 걸친 홍수로 인해 농토의 1/5이 파괴되었고, 2백만에 달하는 곡물 손실을 입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은 갈수록 줄어들어 홍수 전까지 하루 7백g에 달하던 배급량이 최근 1백내지 1백50g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 원조가 없다면

올해 4, 5월경엔 식량이 완전히 바닥날 상황이라는 것이 세계식량계획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들판과 공원의 풀뿌리나 잎사귀 등을 찾아헤매고 있으며, 추수 때가 되기도 전에 곡물의 1/2을 먹어치웠다고 한다. 식량을 대체할 돈·가축·식물 등도 점차 고갈되고 있어 2년 후엔 이러한 생존의 최후수단마저 사라질 우려에 처해 있다.

북한에 파견된 세계식량계획 사무원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부는 누렇게 떴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세계식량계획 부집행장 나망가(Namanga) 씨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도움을 요청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금까지 6만t의 식량을 북한에 원조해 왔는데, 당장 식량 10만t의 긴급원조가 필요하다며 4천1백60만 달러의 원조를 호소했다.

북한의 실상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많은 지면 속에서도 ‘굶주린

의 실상’과 인도주의적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 14일자 <기자수첩>을 통해 최구식 기사는 황 비서 망명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를 ‘무책임한 논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사관에 몸을 맡긴 채 떨고 있을 ‘노인’에 대해 한마디 위로나 걱정도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인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최 기자의 지적이 균형있게 들리기 위해선 오히려 ‘동포의 굶주림’을 이념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언론에 대해 충고와 비난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다는 느낌이다.

용인대 한상근씨 숨져
“학교측 공식사과해야”

지난 10일 새벽 분신을 기도한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경기3) 씨가 13일 낮 12시30분경 끝내 숨을 거두었다. <본지 2월12일자 참조>

「한상근 학우 분신 민족용인대책위원회」 측은 “학교측이 한상근 학우의 죽음을 단순 비판자살로 몰고가는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며 학교측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또 장례식을 학교장으로 치를 것과 추모비

건립, 병원비등 일체의 경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처: 한강 성심병원 영안실(635-9095) <2면 참조>

“인권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진관스님은 캐나다동포장병연(정역 7년 선고) 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인사를 만났다가,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인권존중과 만인평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

노점상 이종호씨 사망
‘뇌출혈’ 추가 발견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이종호(38·노점상) 씨가 13일 밤 10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사인규명을 위해 곧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당초 뇌혈관경색에 의한 뇌사로 판정했던 인하대병원측은 새로 CT촬영을 한 결과, 이 씨에게서 뇌출혈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
일시: 2월 15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민주노총·법대위

고문피해자 김종경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93년 7월경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서대문 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가혹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뒤 후유증을 앓아온 김종경(46·전기공) 씨가 지난 10일 잠자던 상태 그대로 숨졌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연행, 가혹수사를 받은 그가 슬과 상실감으로 세월을 보내다 4년여만에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신문에 범인으로 보도

12일 용인에 남편을 묻고 돌아온 부인 오 씨는 "남편은 워낙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당한 뒤 충격으로 삶에 애착심도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냈다. 일단 술을 입에 대기만하면 밥은 먹지 않고 15일씩 내리 술만 마셨다. 그러다가 간간이 정신을 차리면 친구 중 전기사업을 하는 이에게 가서 일을 하기도 했다.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김종경 씨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게 된 것은 40대 재미교포인 김해운 씨의 제

보로 인한 것이다. '김종경'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은 내용의 꿈을 꾸던 3년간 탐문수사를 해왔다는 김해운 씨의 제보를 받은 서대문 경찰서는 그 길로 김종경 씨를 연행, 3차례씩이나 집과 서대문서를 끌고 다니며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김종경이 잠했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93년 8월 자살기도

그 뒤 서대문서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본부인 화성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조사한 결과 김 씨는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집앞과 부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를 한 달여동안 감시하고 수시로 들락거렸다.

93년 8월 3일 유서를 써 놓고 부엌칼로 목부를 20센티미터 가량 찔러 자살을 기도해,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 유서에서 그는 자신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문당한 일과 이를 확실히 밝혀달라는 말을 남겼다. 퇴원 뒤 김 씨는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였다.

그리고 93년 9월 김 씨는

김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1억4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구금등 인정 손해승소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 사실 공표죄 등을 인정해 3천8백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김 씨는 굉장히 괴로워하며 당시의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야식집에 다니고 있는 부인은 "그래도 커가는 자식들이 힘이 된다. 죽은 사람만 붙잡는다"며 말을 맺지 못했다. 이들 부 사이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과 아들(고1, 고2) 둘이 있다.

○인권간행물○

□ 함께걸음 2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 노조가 없어야 홀트가 산다?/에바다 복지회, 재단퇴진이 관건이다/연중기획-국내 장애우복지시설 현황과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책/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우 김은경씨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필요해요"/번역연계-미국 장애우 운동사/장애우와 무관하지 않은 노동법 개정동 66쪽, 값 5천원

□ 한울노동법강좌 19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년수'/판례1 '계열사전적시 근로관계, 특약없던 승계안돼'/판례2 '전출시사직, 그룹방침 따른 것이면 무효'/판례3 '조직변경 전직, 동일업무했으면 계속근로'/판례해설-전직시의 계속근로 여부 등 68쪽

□ 후원회 소식(통권 64호)-민가협(763-2606)

·주요내용: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연세대시위로 구속된 송승의 군 어머니 김숙자님'/감옥에서 온 편지-진판스님/출소장기수를 찾아서-김영승 선생님 등 23쪽

□ 포럼 2001 (1·2월호)

·주요내용: 특집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날치기 개악에 대한 노동계 총파업 동향과 전망, 파업의 불모로 불집현 언론, 개정 노동법 무엇이 문제인가?/장밋빛(?) 미래-정보화와 민주주의 등 68쪽

□ 세상열기 2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주요내용: 버마의 학생운동과 페루의 게릴라/법률가가 바라본 총파업(김석연 변호사)/창간 2주년 기념특집 '대안미디어의 내일은 있는가'-대안미디어의 현주소와 과제, 뉴미디어 시대의 대안언론, 방송에서의 대안미디어는 가능한가/문화알기; TV 문화론(속편) 등 96쪽

□ 청년의사 제33호(1월27일, 333-4360)

·주요내용: 기획특집 '의사사회 구조개혁을 이야기하자'/신문 청년의사와 서울시 의사회 공동조사 '의사의 주의·설명 의무에 관한 의사·환자 의식 조사' 등 24쪽

□ 열사회보 3호(97. 1)-추모단체연대회의(742-3180)

·주요내용: 추모(기념) 사업회 소식/논단-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이 산화하신 배경과 요구/1월의 열사·희생자/이달의 시-독립선열과 민주열사 앞에(시인 이기형)/생애와 투쟁사-이인회 등 53쪽

□ 우리네 아이들(1·2월호)-지탁연(275-8505)

·주요내용: 인권보육 커리큘럼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 서문'/보육정책-97년 보육사업지침 요약(보건복지부)/참관기-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97년 시설장 연수 및 제3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등 84쪽

용인대 한상근 씨, 노점상 민병일(경기도 신갈) 씨와 이종호(인천)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교사단결권, 전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전노협 백서 발간
민주노조 10년 기록

전교조 인정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 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국제 기준」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가진 데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정당 및 교육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전세계 조합원 연대 다짐

17일 국제심포지움은 한스 잉글버트 PSI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쉬나 헨리 EI 사무차장, 니시자와 일본교조 부위원장, 샤란 베로우 호주교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헨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헨리 사무차장의 발표에 따

르면,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현존 국제조약은 48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조약, 49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한 96년 ILO-유네스코 권고안과 그 이후의 모든 정부간 회의에서도 교사의 단결권 보장은 만장일치의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업권 침해없어

헨리 사무차장은 ILO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용해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 권리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 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고 민주적인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교육을 강화하는데 기

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진심으로 믿는 정부라면 교사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엔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한국 교사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1백40개 국 교권 인정

전세계 1백40개 국에 2천3백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EI가 교원노동권과 관련해 근년에 ILO에 제출한 국가는 단 두 나라이다. 그 둘은 한국과 케냐인데, 초등과 중등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케냐가 제시당한 이유는 대학 교수들에게 노동조합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요 공판 안내○

- 19일(수) 성두현 외 3(노진추), 국보법(찬양·교무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박병연(서총련 의장)·이주연·전민아·송민호, 국보법(찬양·교무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양규현(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3차개입금지 위반등, 4 단독, 오후 4시, 524호, 속행
- 20일(목) 김광수, 송호준, 국보법(찬양·교무등), 합의21부, 오전 10시, 311호, 선고
- 21일(금) 함운경, 국보법(불고지), 10단독, 오후 4시, 525호, 속행 황윤미, 국보법, 5단독, 오전 10시, 519호, 속행 전락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선고 -서울지법형사국

구독료 납부
지로번호
7618848

용인대생 한상근 씨가 남긴 글귀중 하나

부끄럽고 바깥하다!
더러운 생각을 한다!
나약하고, 개인주의에 물든
내 자신이 정말 싫다.
진찰할 열사가 생각난다.
양심이 썩을거릴 때 움직여야 한다고.
나는 양심도 없었는가
나는 죽은 것이다. 수많은 열사들이
죽었을 때 죽지않고 살아서 끝까지
투쟁하겠노라고 맹세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가
동지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 두었을 때
나는 무어라 말했는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래 치러

현시국과 학원자주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10일 분신한 용인대 한상근(27·격기3, 동아리연합회장) 씨와 2일 새벽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는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완전무효화와 부정비리·폭력적인 김영삼 정권 퇴진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안기부 해체 주장

전철연·한충련·민병일 대법위 등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대학생등 8백여 명이 참석했다. 연설에 나선 이천재(서울연합) 공동의장은 "최근 노점상 민병일 씨의 죽음과 용인대 한상근 학생의 죽음, 그리고 안기부의 불법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해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 김형찬 학생을 보면서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안기부법은 평화를 해치는 법으로, 법의 개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안기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일 씨 15일 숨져

이어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지난 2일 새벽 신갈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두개골이

8센티미터 가량 함몰되는 증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민병일(40·노점상) 씨가 15일 오전 7시35분경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비통해 했다. 특히 민 씨는 96년 2월 경찰과 대치중 강제철거감시 철탑에서 불이나 숨진 신연숙 씨와 함께 일해온 동지였다고 전했다. 남 의장은 "김영삼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 안기부·경찰등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며 "이제 김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노조탄압 분쇄 투쟁에 연대하고,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이 완전무효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상근 씨는 이날 오전 용인대 노천극장에서 애국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되었다.

교회협 홈페이지 개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한글판과 영문판 두가지이며, 한글판 주요내용은 1)교회협 소개 2)교회협의 주요사업소개 3)교회협 소식 4)인권 5)시사와 통일 6)책 소개 7)에듀메니칼 관련 홈페이지 등이다.

주소는 <http://www.peacen.or.kr/ncc>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약자들에게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주간/인/권/호/름 (97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10일>(월)

재경계면, 실업률 2.56% 증가전망으로 실업자수 96년 12월보다 5만명 늘어난 5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 씨 분신기도/경원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 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3천9백55명 추가확인/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소설가 김하기 씨에게 국보법의 잠입·탈출죄 등 인정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 선고/공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때이고 쫓겨난 뒤 병원이기 없어 폐렴과 폐결핵 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파키스탄 노동자 애찬 올라(32) 씨 사망/한국고층, 전국 사립 중·고교 고원 5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3% 재단연줄로 채용된 사실확인

<12일>(수)

서울시, 서울시내 유아원 어린이 대상으로 시력검진 실시 계획/강원도 춘천시 송병각(38·노점상) 씨와 그의 어머니(67) 생활고 비관해 동반자살/녹색연합, 북한 조선반핵 평화위원회 앞으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의 재고를 요청하는 서신 보내/민주노총, 18일로 예고했던 4단계 전면 총파업 유보 결정/경찰청 전국 2백여 개 일선 경찰서 5분타격대에 고무총탄 권총등 지급

<13일>(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북한동포 돕기 결정/1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동 발인과 관련해 간첩색출작업 주장/유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 협조약속/김현수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교수, 최근 2년간 수도권과 경상도의 중·고교 재학생 1천1백84명과 소년원등에 수감된 비행청소년 5백6명등 1천6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5%가 약물 남용 유경험자로 조사돼/한국·미국등 세계 9개국 대만핵 폐기물 반대 연대시위

<15일>(토)

민주노총·범대위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채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

<16일>(일)

한국정보문화센터 남녀 1천5백명 대상으로 '국민생활 정보화 의식과 실태' 설문조사 결과, 생산성 향상(80%), 행정서비스 질 개선(77%), 국민의 알권리 신장(68%)이라고 한 반면, 사생활침해(67%), 일자리 감소(66%) 가능성 우려/전교조 노동법 공동수업 유보결정/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김경술 부장판사), 장을기 씨등 파월장병과 이틀 2세동 1백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패소 판결/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윤우 부장판사) 인천 북구 지하철 공사장 인근 4층 건물 소유주 정아무개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환기탑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공사금지 결정

경찰폭력에 의한
민병일 치사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
오늘 오전 11시
수원 한민선교회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찰폭행치사 경찰이 밝혀낸다?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

경찰에게 폭행당한 이후 쓰러져 사망한 이종호(38·노점상)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보름을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부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 씨를 폭행한 안제화 순경이 부평서 소속이라는 점

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부검과 약물검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지만,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현재 경찰은 안 순경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안 순경의 폭행이 사망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며, 이 씨의 약물중독 가능성과 또다른 폭행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

경찰폭행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지하철 행상 도중 의경에게 폭행을 당했던 뇌성마비 장애인 이동원(29) 씨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96년 4월 10일자 보도>. 심한 머리통증으로 서울 성동구 흥병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이동원 씨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고통에 겨워하고 있다. 담당의사는 "머리에 외상은 없고,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홍제역 구내에서 지하철수사대 소속 김준태(23) 의경에게 폭행을 당한뒤,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6개월간의 입원생활후에도 계속 약물치료를 해왔지만, 올해 들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하고,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며 통증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폭행의경, "이 씨가 거짓말한다" 주장
이 씨의 상태가 악화된 데는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동원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비를 가려줄 재판마저 지연됨에 따라 이 씨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교회·복지회관·관공서 등, 이 씨 진정서 써주기도
최근 가족들은 교회, 복지단체와 심지어 구리시청 관계자로부터도 이 씨를 위한 진정서를 받아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관(관장 김학목)은 "이 씨는 신체장애가 있지만, 마음에는 장애가 없다"며 "이 씨는 허위로 구타를 당했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써 주기도 했다.

이 씨는 매일 저녁마다 병원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만은 머리의 통증도 잊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거듭 "신속한 재판"으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경찰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데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장, "이 씨가 거짓말한다" 주장
이 씨의 상태가 악화된 데는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동원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비를 가려줄 재판마저 지연됨에 따라 이 씨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은 즉각 "경찰청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다시금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국가보안법이 라는 명에 희생당한 대다수 민주통일인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찰하겠다는 것으로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심증만 있을 뿐, 객관적 불충도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이한영 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사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물고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과제와 전망

-하태훈 홍익대 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한달의 통계를 보면 가히 사법사상 혁명적인 사건으로 불리울 만큼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법에 규정된 구속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영장발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이 1월 한달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장 발부율이 예년의 90.3%에서 88.4%로 낮아졌으며, 이는 구속 영장청구 건수가 95년 1천2백30건, 96년 1천57건에서 5백23건으로 절반 정도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인해 구속영장발부가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속사유 구체적 제시 필요
피의자신문에 의한 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이 도식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구속사유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구체적이

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병확보를 통해 자백을 획득하려는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대치하거나 개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인정 또는 불구속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법정 구속사유인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야간에도 심사를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이 결정된 경우에는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오후 4시, 그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그렇다면 오후 2시 이후 영장이 접수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날 심문이 이뤄지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 한달간의 분석과 평가

-김칠준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영장실질심사제등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구속수사의 관행이 무너지고

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건수가 전에 비해 1/3으로 줄어든데다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3배 높아졌다. 인신구속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인권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영장실질심사제가 뿌리내리도록 법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입법론으로 긴급체포이후 법원의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사가 사후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거나 법원이 나중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법원의 지난 1개월간 통계에 따르면, 현행법으로 체포된 경우가 24.8%를 차지했다. 체포후 철야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는 앞으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철야조사가 더욱 빈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철야조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고문수사이며 불리진술 거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 가족도 심사과정에 참여 필요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변호인의 참여율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변호사들이나 당직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제기된 문제점들

법감정의 문제: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이후 단기 실행을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과연 법원이 실행선고를 쉽게 할 수 있는나. 그리고 실행선고를 받는 경우 누범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제재등 각종의 제재도 받게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실행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등 다양한 형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실행전과자에 대하여 집행유예결격사유를 삼는 규정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어려움: 불구속 송치사건에서 검사가 출두요청을 해도 출석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뇌물사건이나 조직폭력사건등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의 수사가 어렵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수사인력의 부족: 수사인원의 충원등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심사제의 제도적 의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실적 독려가 없어져 무리한 짜깁기 수사가 없어졌다.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전국사국선언자 대회
2월20일 오후2시
명동 향린교회 3층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파출소에서 쓰러져 사망한 민병일(38·노점상) 씨의 사인은 경찰폭행이라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계·의료계·법조계·인권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된 [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오세철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 씨에 대한 의무기록과 부검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민

씨는 경찰관에 의해 앞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임중환 원장(인천 평화의원)의 부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 씨의 앞 이마 부위에 표피박탈(피부가 벗겨짐)과 두피하출혈이 나타났으며, 이 10cm 정도 두개골이 골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 씨의 머리 앞 부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는 경찰측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다. 임중환 원장은 "비교적 작용면적이 넓은 둔체가 전두부(앞 이마)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결과, 민 씨가 신갈파출소 이외의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용의자인 채규근 상경에 대해 불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테러 비상' 소식에 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 17일 황용하 경찰청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화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무효화 논의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주요한 근거로서, 이한영 씨가 의식을 잃기전 손가락 두개를 펴보이며 "간첩이다"고 말했다는 현장목격자의 증언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북한 사회 문화부 요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인 점을 들었다.

그런데, 19일 중앙·한국·한겨레 신문들은 일제히 목격자가 "간첩...간첩 말한 적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장에 있던 사람중 어느 누구도 "이씨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목격자 증언뿐 아니라 이한영 씨 저격에 사용된 권총의 정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당초 '4조우선 브라우닝 권총'이라고 발표했다가, 18일 '6조우선 브라우닝 권총'이라고 번복했다.

이한영 씨의 피살사건의 주요근거들이 뒤바뀐 보도를 접하며 국민들은 잠시 어리둥절하게 된다. 또한 사건발생 직후 수사초기단계에서 결론을 내린듯 서슴없이 북한 의 소행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안보 위기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한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대다수 언론들이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톱기사로 보도한데 반해 조선·동아일보는 철저히 언급을 회피했다. 조선일보는 '테러 수사 원점 맴돈다'는 톱기사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 미숙으로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뿐이며, '간첩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이씨 피격이후 현재까지의 수사상황 및 향후과제를 점검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쓰러진 이씨가 '간첩'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남상화 씨 등의 진술에 따라 북한간첩의 소행으로 단정, 군 안기부와 함께 공조수사에 들어갔다"고 재언급할 뿐 '진술의 번복'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오히려 '간첩 오인신고 폭주'(19일자 39면)로 경찰들이 바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사 선택권의 문제라고 하기엔 이한영 씨 피살사건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사가 누락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의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정보를 편견없이 전달하는 것 또한 본연의 임무중 하나다. "부정과 타락을 과감히 파헤치고 진보와 개혁을 위해 투쟁하라"는 풀리치의 말이 너무도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우리의 언론현실을 목격하게 된 셈이다.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노동법 개정투쟁을 판가름할 4차 총파업 예고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단위사업장별로 총파업 결의를 모아가고, 17일부터 각 사업장 노조대표들이 철야농성을 시작했으며, 19일부터는 국회앞 집회 등 가두집회와 시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19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교조, 기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백여 명과 국제자유연(ICFTU),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등 국제노동계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한보비리 축소 은폐 규탄 및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 1차대회’가 열렸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지금 우리는 그동안 투쟁의 성과를 유지하느냐 잃어버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계를 대표해 방한한 ICFTU 아태지역본부의 캔 더글러스(뉴질랜드) 위원장과 국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PSI) 한스 앵글버트(네덜란드) 사무총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용기와 투쟁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며 “세계 모든 노동자들은 끝까지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날 집회엔 공공부문 총파업의 뇌관인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통신 노조는 독자적으로 19, 20일 양일간 각 지부 서울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재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지침만 떨어지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행사와 동정 ○

□ 바른 대통령만들기 기획시리즈 제3차 국민대토론회 -“여·야 각정당 대선후보 선출방법 이대로 좋은가?”

- 일시: 2월20일(목) 오후 2-6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 사월혁명연구소 제50회 월례발표회 “정경유착과 한보사태”

- 일시: 2월20일(목) 오후6시
- 장소: 사월혁명연구소 회의실(888-3682)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7 제6기 대의원대회

- 일시: 2월22일(토) 오후2시
- 장소: 기독교회관 신관 2층 대강당(708-4113)

□ 제18차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 회의

- 일시: 2월22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5층 회의실(744-7437)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의 주체로서 전교조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1차적으로 1천명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아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전교조 합법화가 이뤄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8년 전 우리는 꿈 속에서도 눈에 밝히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생이별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그 아픔을 잘알면서도 또다시 해직을 각오한 조합원 명단공개에 나서는 것은 우리교육이 위기가 너무 깊고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과 이를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의지는 꺾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왜곡되거나 실종될 우려가 나타날 경우 2단계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우리는 89년 이 땅의 입시경쟁교육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전교조를 창립하고, 1천5백여 명이 해직을 당하는 아픔과 7년이 넘도록 온갖 탄압의 신산고초를 겪으면서도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하여 연구와 실천에 온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중략)

김영삼 정부의 위로부터의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한 교육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개혁의 실천에 나설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개혁을 위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며, 세계 각국의 보편적 규범이 옹변하고 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계속 받아야 하겠는가.

이제 학교현장에서의 전교조의 실체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전교조를 제외하고 학교개혁을 논할 수 없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40만 교사와 함께 보충수업·자율학습 등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촛지 등 반교육적 학교문화를 청산하고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1997년 2월 19일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추진본부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원천무효화!
민주적 노동법 재개정!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엄

안기부법 제정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제논의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안기부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과 독일의 예를 통해 안기부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과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안기부법에 대한 공방은 이제껏 수사권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국한되어 왔다. 즉 안기부법 조항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논의만 진행되었다”고 지적한 뒤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과 과거청산, 민주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기획취지를 밝혔다.

안기부 민주화 방안 모색 안기부등 공안정보기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간

단체에서 공안정보기구의 권한 남용과 폐단을 바로잡고, 안기부가 민주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주최측은 공안정보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과교수는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돼 다행이다. 준비기간이 불과 2주일밖에 없었는데도 흔쾌히 승락해 주었다”며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보기구 전문가 한자리에 참가자중 마틴 쿨차(독일 사민당 소속) 교수는 헌법과 행정법, 특히 공안정보기구 관련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볼프 피스너(독일 녹색당 소속)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연합 입법전문가인데, 이 단체는 시민적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또 초청자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미국의 쾰게이 지(역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위싱턴 대표) 씨이다. 그녀가 소속된 역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는 매카시즘 선봉과 함께 미의회에 설치된 반미활동특별조사위원회

의 인권침해조사활동에 반대 60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이 단체에 대한 FBI의 정치사찰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기록을 갖고 있다.

타산지식 계기로

심포지엄은 4부로 이뤄졌는데 1부에서는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의 주제사태 「공안정보기구와 민주사회」(쿨차 교수), 「안기부의 조직과 권한」(국내 발제자)에 대한 기초발제가 이뤄진다.

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에서는 각국 공안정보기구의 권한남용 사례를 짚어보고, 사회가 공안정보기구의 권한 남용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노력을 어떻게 벌여왔는지 살펴본다. 3부에서는 「공안정보기구의 범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이 각국의 사례와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4부는 「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장이다.

안기부의 수사권 보유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안기부의 정보수집권 행사는 어떻게 남용되며 통제는 얼마나 가능한가? 안기부에 대한 시민적·법적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의 의의를 통해 민주사회 안에서 공안정보기구로서의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인권하루소식>이 올해로 창간 4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또한 올해 12월초에는 1천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이 시대의 대표적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집중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운영·자문위원, 하루소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때: 3월 5일(수) 오후 4-7시
장소: 성가수녀원

발제: 인권운동에 있어 <인권하루소식>의 역할(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취재력 보장방안과 편집방침에 있어서 일반신문과의 차별성(미경/ PC통신 시대의 <인권하루소식>(김형준, 바른통신 대표)/ <인권하루소식> 마케팅 전략(김겨성 기독교 컴퓨터센터 소장)/ 포맷 혁신과 주간지화, 월간지화 가능성(김경환, 말지 기자)

시국선언 전국 파도타기

시국선언자대회, 노동법 재개정 촉구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0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한보비리 축소은행 규탄과 날치기 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전국시국선언자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현재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 대표자들의 수가 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7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21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청년 1만 명의 선언을 시작으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수원·부산·서울·울산·부천·광주 등 각 지역별로 1만명 내지 3만명 시국선언을 신문전면광고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자대회에는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상곤 민교협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 등 각계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정경유착의 근원적 해결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 관련책임자의 엄중처벌 △날치기 악법의 전면무효화와 3월1일 이전 노동법의 민주적 재개정 △간첩 5만명설 등 허위사실 유포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한편, 문대골 목사는 이한영 피의자 사건과 사건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목사는 "이 씨를 저격한 범인이 단순 형사범일 가능성을 언급했고 해서 분당경찰서장을 경질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미리부터 '간첩소행'으로 못박고 시작한다면,

수사가 결코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이유 면회 불허 영등포교도소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제3차 국제진상조사단의 켈 더글러스(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위원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집시법 위반) 씨를 면회하러 갔으나, 영등포교도소측이 이를 불허했다.

교도소 보안부측은 신분조사를 이유로 이들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한 뒤 "교도소내 질서유지와 안보를 이유로 가족외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지원 인정하라 전국연합

정부는 20일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6백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식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돕겠다는 민간차원의 노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차원의 대북식량 지원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서평○

<사상>(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왔던 전통적인 쟁점중의 하나이다.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안에 깔려있는 서구적인 인권개념에 대한 반사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은 서구적인 개념이고 제도라는 통념과 냉전종식 후 미국이 동구권이나 중국같은 비서구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인권의 특수성을 주장할 경우, 인권을 억압하는 아시아국가들의 논리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없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인권이란 '그 나라의 지역·역사·문화적 산물'이라는 주장 속에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개발독재라는 미명으로서민·정치적 권리를 유보한채 자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 내정간섭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렇듯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주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계간 사상> 1996 겨울호 특집은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쟁이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 보완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 논의에 있어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라는 논문을 통해 한상진 교수는 "인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인권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양과는 다른 눈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 동양에 있다는 자의식이 동양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교수는 한 예로 서구 중심의 인권 개념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주축으로 발전한 것이라면, 동양에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해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이 개념이 개인중심적인 서구 인권 개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교수를 비롯하여 이 책의 많은 저자들은 서구 중심의 인권 담론의 일면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풍부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론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2편의 글이 실려 있고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아시아의 가치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을 다루었고 2부는 불교, 유교, 이슬람 등 동양 내부 문화에서 인권 신장에 궁극적인 요소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글로 꾸며졌으며 3, 4, 5부는 아시아에서의 여성, 사법제도, 민주화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 어떻게 인권운동을 해야 하나? 인권운동의 보편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얼마전 글을 인용하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는다. "인권은 개인의 참다운 자아 인식 속에서 출발한다(한겨레 94.5.27일자)"

- [인권정보자료실] 제공

범대위·민주노총
범국민 결의대회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하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은 20, 21일 연합통신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하고 제 수용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하고 조건부 수용"이라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연합통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하고의 도입을 찬성할 수는 없다"며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왔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하고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개정안에는

최영애 소장 제임 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7년 정기총회를 통해 최영애 소장을 재선출했다.

"굳이 정리하고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정리하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왜곡보도가 1천2백만 노동자와 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혼선을 가져다 주었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가 황장엽 비서 망명, 한보사태 등에 몰린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더니 임시국회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임시국회가 열린 뒤 21일 오전 11시 안기부소위원회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 할 형편"

류세홍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본과 3년) 씨는 "류세홍 선배는 한총련 대표로 어려움 속에서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일을 택했다. 그런만큼 이를 통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백만학도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방학중이라 어려움이 따르지만 물품판매와 1인당 1만원 내기 모금활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95조). 단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인 전상운 의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많고, 당시 세홍이의 방북하는 사실도 모른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이달안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의제기를 통해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덧붙여 학생들에게 "세홍이 부모님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류 씨 가족의 경우 경제적 형편은 더욱 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님의 경우 20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해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고수수입은 없다. 생계마련을 위해 어머니가 음식점 일을 나가고 있는데,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면 살고있는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이다.

〈자료 요약〉 -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이 계속 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보고한다. 일부 수인들은 '사상적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를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다.

b: 실종

실종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망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집에서 한밤중에 보안대에게 끌려가 재판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직접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남한인, 일본인, 여타 외국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30년간 20여 명의 일본인이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위협할 의도가 명백한 몇 건의 납치와 인질 잡기, 여타의 폭력행위가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남한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는지 모른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다.

c: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 또는 처벌 최근의 관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반면에, 민을 만한 소식통은 수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고문·질병·기아 또는 공개처형으로 죽는다고 지적한다. 감옥의 상태는 혹독하다. 국제적인 민간단체와 망명자들에 따르면,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이 함께 투옥된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공동된 처벌이며, 벌목과 작물재배와 같은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처형이 일반적이라고 보고한다.

d. 자의적 체포와 구금 또는 처형

망명자들은 북한이 약 15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을 만한 한 소식통은 북한에 12개의 강제수용소가 있다고 보고한다. 91년 7월, 당 서열에 들었던 한 망명자는 북한에는 2가지 유형의 구금지역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조건이 극도로 열악하고, 수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폐쇄 수용소이며 다른 하나에서는 수인들이 '복권'될 수 있다.

e. 공정한 공적 재판의 부정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가족 구성원

의 한 명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전가족이 처벌 받는다. 정부는 통신과 전화를 감시한다. 전화는 매우 제한된 선에서 일부 국제통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화는 국내통화에만 제한되어 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외국여행과 이민, 재귀환의 자유는 '사회주의자의 생활규범'을 따르고, 개인의 시민·정치적 자유에 선행하는 '집단주의 정신'에 복종할 것을 필요로 하는 북한체제의 목적을 지지하는 활동만을 허용하는 선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3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 시민이 정부를 교체할 권리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할 어떠한 권리나 장치는 시민은 갖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회의와 지역, 시, 군단위의 선거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모든 경우 단 한 명의 정부승인 후보만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투표자의 99% 이상이 정부가 승인한 후보의 100%를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부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및 비정부조직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권상황을 감시할 어떠한 독립적인 국내조직도 허용하지 않는다. 92년에 북

한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이 조직은 북한내의 어떤 인권침해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고 북한체제의 선전도구일 뿐이다. 4월 국제앰네스티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법적 개혁과 수인의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북한정부는 여타의 국제인권기구의 방문요청을 무시해 왔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이용가능한 어떤 정보도 없다. 15세 까지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출신성분에 따라 일부 아동은 교육의 기회를 부정당한다. 평양시내에서 장애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망명자들은 장애인은 일상적으로 농촌 지역에 배치된다고 보고한다.

6부 노동자의 권리

비정부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 아니지만 옹호자 지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결사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임금은 당국이 정한다. 국가가 모든 직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없으며, 정부는 건설 목표를 위해 일상적으로 군대 징집을 이용한다. 16세 이하 아동에게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산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짧은 기간 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된다. <끝>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때: 3월5일(수) 오후 4-7시/ 장소: 성가수녀원

법국민대책위
서명용지 국회 전달식
일시: 2월25일 오전11시
장소: 국회의사당
민원실 앞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황장엽 사건을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54.0%가 동의를, 32.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46.4%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2, 23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7백3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기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4.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는 '정권으로 부터의 분리독립'(46.4%)이 가장 많았고, '정보권과 수사권

분리'(20.2%) '예산과 업무의 공개'(17.3%) '권한의 축소'(12.0%) 순이었다.

“안기부 두렵다” 61%

이번 설문조사결과 국민들의 대다수는 안기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는 질문에 '여당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72.8%가 응답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3%가 동의를, 32.6%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많은 국민들이 안기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기부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61%가 '두려운 느낌이 든다'고 대답한 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고 대답한 이는 3.3%에 불과한데서도 확인되었다.

“안기부법 재논의해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협은 “정부와 여당은 국

민 여론조사 결과를 결핵허수렴하여 개악된 안기부법의 재논의와 더불어 안기부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는 96%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 ±3.7%이다.

“날치기 원천무효” 범대위 총력투쟁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의 투쟁을 집중시켜야겠다”고 밝혔다. 24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내용과 추세
-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범죄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면적 투쟁·각국의 사례와 전략
- 제4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전망

때·곳: 27일(목)

오전 10시~오후 7시/번호사회관

주최: 법국민대책위(777-4014/5)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필력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참교육의 깃발, 교원노동권 확보의 의침이 힘차게 필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 전교조) 소속 16개 시도 1백63개 지역분회장 1천5백여명은 24일 오후 여의도광장에 모여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학교 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20대 젊은 교사부터 백발성성한 60대 노교사까지,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동해 속초지역에 이르기까지 남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들은 '참교육' '전교조'의 깃발아래로 모였다.

이미 전교조는 22일부터 야3당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회에 맡겨달라던 야당이 22일 "교원 노동기본권은 추후 논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간의 농성, 지방으로부터의 여성으로 피곤한데도, 단상에 오른 각 지역 전교조합법화 추진본부장들은 엄숙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투쟁결의를 밝히나갔다.

"문제는 우리 가슴속의 두려움이다. 투쟁만이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룰 수 있다." (충주 주덕중 오향균 교사) "김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씨와 마찬가지로 전교조를 탄압한다면, 1년 뒤 김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서울사대부고 김민곤 교사)

현장 교사들의 다짐 못지않게 이영희 위원장의 결의도 단호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는 가까운 장래에 생취된다"며 "40만 교사, 80만 공무원과 함께 사회개혁·정치개혁을 위해 전교조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위한 10대 핵심요구안을 발표했다. 10대 요구안의 첫번째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이었다. 연단에 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전교조합법화는 노동법 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교조 합법화없이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없습니다."

겨울의 끝을 알리는 포근한 날씨 속에 참석자들의 표정은 결연하면서도 환한 모습이었다. 한편에선, 집회장 뒤편에 삼삼오오 모여 있던 교육계 관계자들의 그늘진 얼굴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신한국당사 앞에서 진행된 마무리 집회에서 김귀식(63·서울 중화고) 교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더 이상 전교조의 합법화를 구걸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할테면 해 봐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하셨습니다가?

지로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주/간/인/권/호/름

(97년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18일>(화)

청소년보호법 국회통과, 7월1일부터 시행예정/한국소비자보호원, 전국 놀이방·어린이집등 48곳의 침구류 사용 실태조사결과 90%이상 성인용 이불을 사용해 질식사고 위험있다고 지적/전교조, 조합원 1천명 명단 공개

<19일>(수)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입법 필요성과 경쟁 유착의 실태등에 관한 토론회 가거/재경원 발표, 96년 한해 국민 1인당 세금 1백80만원으로 95년보다 20만6천원(12.9%) 증가/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공청회 열렸으나 노사간의 입장차 여전히 드러나/경기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벌어진 노점상 민병일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대책위' 경찰이 폭행치사 사건을 단순사고로 축소했다며 진상조사 요구/전국양과생산자조합등, 정부가 양과를 추가수입할 경우 양과값 폭락 우려된다며 중지요구/경찰청, 이한영씨 피격사건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 부분 부장인 김종남 경기분당경찰서장 전격경질/경실련, 김 대통령의 취임 4년간의 대선공약 이행실적 D+, 노동법 개정 F 평가

<20일>(목)

정부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북한에 6백만달러 어치 식량지원계획 밝혀/민주노총,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 촉구집회/이영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내리진 출국금지로 출국지연/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미국정부가 넘겨준 5·18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의무부장관을 상대로 민변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민가협, 홍승상 전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본부 대공분실서 교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라며 반발/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폐를 위한 기독교 비상대책위'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사 2천9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발표

<21일>(금)

노동부 발표, 96년 10월 지방노동관서등에 산재는폐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18개 사업장 62건 신고/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된 이광철(전북연합 정치위원장) 씨 항소심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의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50대 명예퇴직자등 1천여 명 몰려

<22일>(토)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전교조 야3당 농성돌입/프랑스 시민 10만 명 개정 이민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가행진

<23일>(일)

22,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일-대만 지식인 3백여명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주제로 심포지움 개최

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단계적 4단계 총파업 돌입
26일 간부집회
27일 간부파업
28일 전면파업

발행처 : 민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실망과 비난으로 나타났다.

민변·민주노총·전국연합 등은 각각 논평 또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날치기·한보사태 등에 대

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는 상투적 미사여구"라며 한보사태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 날치기법의 무효화와 민주적인 노동법 개정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은 "개악된 안기부법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외면해 버렸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용납 못한다'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각 단체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전 세계 각지에서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행사를 갖자" 캐나다의 한 민간단체가 내놓은 제안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COBP)은 인터넷을 통해 "3월15일을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하자"며 "행사에 참여할 개인이나 단체들의 연락을 부탁한다"고 전해왔다. 이 단체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경찰폭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경찰폭력은 이미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달 들어서만 노점상 민병일, 이종호 씨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COBP의 제안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거리다.

COBP는 경찰폭력의 희생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소수민족, 소단위정치그룹, 무주택자, 매춘부, 동성애자 등 경찰권위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개인·단체의 대표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95년 4월 25일 몬트리올 시위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몬트리올 시위사건은 반이민·반여성·반동성애·반낙태·반유대인을 내세운 인종주의적 조직 Human Life International의 몬트리올 방문에 대해 수천명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COBP는 구타·가혹행위·협박·증거조작 및 누명에 의한 기소 등 경찰력 남용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찰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정보 교류·희생자구제책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소: COBP/2209 rue Joliette/Montreal, Quebec/Canada H1W 3G5
·E-mail: seahorse@odyssee.net

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철회요구를 국가안보 위협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카시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날치기 통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 개정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날치기를 진실로 반성한다면,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라"(민주노총)

"이번 담화에는 일련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깨우침이 없다. 지금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안기부법과 노동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비롯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통령의 모습은 진정한 사과라기 보다는 3류연기에 불과하다. 악법의 원천무효화, 김현철 씨의 청문회 출두, 특별검사제 실시 등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어야 했다"(진보정치연합)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

51만여 명 서명 참여

'날치기 무효' 국회청원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5일 국회를 방문, 범국민서명운동 1차결과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진행된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범국민서명운동'에는 전국적으로 51만6천9백98명이 참가했다.

안기부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제1부: 공안정보기구의 개혁과 올바른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방안
- 제2부: 공안정보기구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각국의 사례와 전략
- 제3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전망

때·곳: 27일(목)

오전10시~오후7시/변호사회관

주 최: 범국민대책위(777-4014/5)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돼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장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당원(본 재판부를 말함)의 판단

① 먼저 반국가단체가입의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유나진과 안재구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위에서 본 판결사실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위 유나진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3. 1. 경 유나진은 전주 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공소의 안재구의 제의를 받고 자신이 그에게 피고인의 신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때까지 피고인의 대학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경력 사항 등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위 안재구에게 이야기 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과 자신이 1993. 6.경에는 만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5. 초경 마지막으로 만났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구국전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구국전위의 강령규약등을 보여준 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이 구국전위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진술은 안전기획부에서의 조사당시의 억압된 심적 분위기가 연장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유나진은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자신의 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을 답습하다가,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이르러 공소의 박화국등에게 구국전위의 강령규약 등이 담긴 필사본을 보여주면서 조직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위 구국전위에 가입시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안재구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종전 검찰 진술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구국전위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위 유나진, 안재구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구국전위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유나진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호에 부합되고 있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② 나아가 국가기밀누설의 점과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원이 믿지 않는 유나진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국가기밀"이라는 문언의 내재적 한계 내지 문외적 한계를 훨씬 벗어나고 "기밀"의 실질적 요건을 털어 버리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일반 국민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 적용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 34, 35, 36 결정 참조)고 당원은 판단한다.

위와같은 견지에서 보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은 도저히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략)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 1951판결, 1994. 4.15. 선고 94도 126판결, 1995. 9. 26. 선고 95도 1624판결 등 참조)는 취지로 폭넓게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국가기밀"이라는 문언의 내재적 한계 내지 문외적 한계를 훨씬 벗어나고 "기밀"의 실질적 요건을 털어 버리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일반 국민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 적용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 34, 35, 36 결정 참조)고 당원은 판단한다.

위와같은 견지에서 보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은 도저히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략)

민주노총 단계적 4단계
총파업 돌입
27일 간부파업
28일 전면파업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폐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경찰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등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은 경기대학교에 난입, 건물내에 있던 학생 및 귀가중이던 학생 등 12명을 연행해 마포·서부·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9명을 26일 낮 석방했고, 김주환(회계 96) 씨 등 3명은 조사를 이유로 풀이지 않았다. 경찰은 25일 밤 신한국당 서울지부당사에 페인트병 등을 투척하고 달아난 학생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경기대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현장범이 아닌 학생들이 연행한 사유에 대해 경찰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사유나 변호인 조력권 등에 대한 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등 적법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서에서 조사 받은 최영준(경영 91) 씨는 "연행단계는 물론, 조사작성이 끝날 때까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란다원칙 완전 무시

또한 학생들은 연행과정은 물론, 경찰서 조사과정에서도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학교에서부터 신한국당사로 끌려가는 동안 곤봉과 주먹으로 시종 얻어 맞았다. 신한국당사 앞에서도 무릎을 꿇리고 신발을 벗겼으며, 벽에 머리를 처박은 상태에서 군화발로 찌어댔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출입기자들의 눈을 속여가며 폭행이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가 기자가 들어오자 의자에 앉게 했다. 기자가 조사실에 있는 동안, 학생들은 복도로 끌려 나가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지난 22일 제6기 경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을 사업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의장단에 이창복 상임의장, 천영세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전국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과제로 민주화투쟁, 민생민권사업에 있어 △날치기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지속 전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사업 △임금인상투쟁, 의보통합, 방송개혁,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10항쟁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위원회 사업에도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특히 5·18 광주학살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연합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권력교체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에 기초한 집권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악법 무효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지향을 발전시켜 권력교체과정에서의 민주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8·15통일사업은 통일운동전선의 단결을 실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전국동시다발로 하나의 대회를 실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작년에도 한차례 당해 한편, 이처럼 불법연행과 수사가 빈발하는데는, 으레 당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피해자들의 인식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여파로 각 대학마다 경찰력이 수시로 투입되던 때, 경찰은 수배자를 찾는다며 한밤에 경기대에 난입해 학생 43명을 동아리방 등지에서 연행했다. 결국 모두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학생들은 아무런 법적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대 교직원 박용규(학생과) 씨는 "부당한 연행에 대해 화를 내야할텐데, 풀려나는 것에 기뻐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단위노조 간부 파업 민주노총

민주노총 각 단위노조 간부 5백여 명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앞에서 악성 규탄집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 방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1천개 노조 간부 5만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기부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실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때·곳 : 27일(목)
오전10시~오후7시/번호사회관
주최 : 범국민대책위(777-4014/5)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쿤츠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 필요로 한다.

2. 법적 제한 위한 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도구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웠다. 정보처리에 관한 자금의 조건하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은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 저장, 사용, 유포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은 “그 점에서 자기 개인 정보의 처분과 사용에 대해 원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한다.

물론 어떤 국가도 관련된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일정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게 될 때에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요청들은 ‘연방’과 ‘주’의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법학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률들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세 개의 정보기관들에 대해 어떠한 경찰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기관들은 “정보사무상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률들은 경찰 및 외국 의 정보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다. 또한 법률상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공안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여지가 많다. 즉 새로운 법률상의 규정들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활동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한다.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은 점차 여러 형태의 협력활동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침해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법률들은 경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밀정보작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밀 정보원”과 주거에 대한 “도청”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 결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작용과 시민에 대해 폭넓은

집행권한을 갖는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간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3. 통제문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행정적 통제와 의회와 법원을 통한 통제와 민주주의적 여론을 통한 통제등 일단 네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론에 따르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는 다른 국가권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의회에 의한 통제는 의회의 지위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 사실 독일에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 여러 의회통제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들 기관의 통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이들 통제기관의 구성원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몇 안되는 “야당”의 통제위원들의 경우조차도 비밀중수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은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관(die Datenschutzbeauftragten)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이 “공안기관”에 대해 할 수 있는 통제는 대체로 제한되어 있다.

정보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원의 통제는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그

러나 각 개인은 발생하는 조치의 비밀성 때문에 정보기관의 조치가 보호되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범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지를 극소수의 사례에서만 알게 된다.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면 행정재판상의 절차는 공공에 대해 사건을 폭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몇가지 덧붙이는 말

의회 및 법원의 통제는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통제들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원의 조사권과 정보보호담당관 또는 그밖의 독립적인 통제기관의 지위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통제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과 기타 공안기관의 과제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비록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인계는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지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모든 침해행위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얼마만큼의 밀도로 정할 것인가, 즉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는 공개된 의회의 토의 및 심리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구독료 납부하셨습니까?
지로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시한부 총파업 돌입
◇날치기 안기부법 철회
를 위한 국제연대대회
오후 2시 국회앞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에서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게 되었다는 현 사안의 문제점 외에도 안기부를 비롯

한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심포지움은 미국·독일 공안정보기구의 사례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투쟁을 비롯해 국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뒤,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투쟁방안은 무엇인가’의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됐던 방양균(43·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엠네스티(대표채명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했으나, 전남도청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났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신원조회 보류에 대해 전남도청 정보과 관계자는 “중앙(경찰청)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방 씨를 만난 정보과 최재환 주임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방 씨는 “밥을 먹지 말라고 할 땐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여권 발급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시국사범의 출국제한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홍성담(41·화가) 씨는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월경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안상은 변호사는 “현행 여권법만으로도 방 씨에 대한 출국제한이 가능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여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8조 제5호)의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우선적으로 안기부의 집권 권한을 대폭 분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안기부의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미국 경우 FBI가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CIA가 해외정보를 담당하듯이 우리도 정보수집권에 있어 국내의 부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 교수는 “당면 목표로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검찰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르틴 쿤츠(독일, 공안정보기구 관련법 전문가) 교수는 “장기간 분단상황을 겪은 독일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5, 60년대 독일에서도 고무·찬양죄에 의한 처벌이 있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였다”고 말했다.

보수언론 견제필요

안기부법 개혁과 관련한 언론의 문제점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원섭(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안기부법 개악은 사회적 문제로, 남북분단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기부법 개악에 있어 안기부측이 언론에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며, 언론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항의전화절기·항의방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기부법 3조 문제제기
장주영 변호사와 윤기원 변호

호사는 안기부직원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혁의 걸림돌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문제를 지적했다. 임재홍(민주법연) 연구위원은 “국보법은 재판악법의 개념에 있어 걸림돌”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도 ‘국보법과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안기부 개혁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기부법 폐지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법 개혁과 관련한 언론의 문제점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원섭(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안기부법 개악은 사회적 문제로, 남북분단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기부법 개악에 있어 안기부측이 언론에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며, 언론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항의전화절기·항의방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면으로 이어짐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홍사단 대강당에서 '정신대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일본 전범을 입국 금지하자는 주장이 다양한 논거를 통해 제시됐다.

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협의회 이동우 대표는 "정신대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국내에서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 학교와 논문주제로 선택하는 학생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93년 워싱턴 일본대사관 앞 시위, 정신대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 국회의원 27명의 공개서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으로 정신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워싱턴포스트> <LA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정신대 문제를 대서특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희생자들이 죽고나면 운동의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서둘러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특히 미국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발표를 통해 생체실험과 정신대 범죄에 관련·가담한 일본인 16명의 입국을 거절한다고 밝혀 커다란 파문을 던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서도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참석자들 간에 활발히 개진됐다.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시효부적용 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즈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며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1면에서 이어짐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턴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접근보다는 김형찬씨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비판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안기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장기적 싸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수는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①안기부의 과거 불법비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및 기타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②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③이른바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일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한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공안정보기구 개혁을 위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운동을 벌여나가지고 제안했다.

행사와 동정

-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규탄대회(서울지역)
 - 때: 2월28일(금) 오후 12시 30분
 - 곳: 대만대표부앞
 - 주최: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735-7000)
- 농촌지역 사회 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두밀학교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 때: 2월28일(금) 오후 2시-5시
 - 곳: 종로천주교회 3층 강당
 - 주최: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745-8313)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토론회
 - 노동자 총파업투쟁과 97년 노동운동의 과제
 - 때: 2월28일(금) 오후 6시-9시
 - 곳: 연세대학교 신경영학관
-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 공연 「대지의 눈물」
 - 때: 3월1일(토) 오후 4시-7시
 - 곳: 독립공원
 - 주최: 한겨레신문사 · 입장료: 무료
- 3·1절 기념 한일공동심포지움
 - 때: 3월1일(토) 오후1시-5시
 - 곳: 일본 동경 문경구민 센터 2층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지원대책위 회의
 - 때: 3월3일(월) 오후 6시 30분
 - 곳: 민주노동 5층 회의실(744-7437)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 때: 3월4일(화) 오후 6시-9시
 - 곳: 동국대학교내 동국문화관 그릴(266-3950)
 - 주관: 불교인권위(734-6401)
- '민주화운동과 역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 학술세미나
 - 때: 3월6일(목) 낮 3시
 - 곳: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
 - 주최: 추모단체 연대회의(742-3180)

3월1일자는 휴일 관계로 쉽니다

구독료 납부하셨습니까?
지로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3월

(제834호 - 제853호)